



전병곤 · 구기보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인 책 2008년 12월 12일
발 행 2008년 12월 17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 900-4300
(직통) (02) 901-2527
(팩시밀리) (02)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봄 (02 2275-5326)
인 책 처 양 동 (02 2272-1767)

가 격 7,500원

©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
기보[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 (KINU 연구총서 ; 08-05)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72-6 93340 : ₩7,500

중국 외교 정책[中國外交政策]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

349.12011-KDC4

327.510519-DDC21

CIP2008003910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기존 연구 검토	5
3. 연구방법 및 구성	8
II. FTA에 관한 국제정치적 논의와 적용	11
1. FTA의 개념 및 내용	13
2. 국제정치적 논의와 적용	15
III.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사례	23
1. 추진배경	25
2. 추진현황 및 사례	35
3. 전략적 의도 분석	47
IV.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영향	55
1. 추진경과	57

2. 추진의도	61
3. 영향평가	69
V.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대응방향	91
1. 한·중 FTA와 남·북·중 관계의 함수	93
2. 남북관계를 고려한 대응방향	110
VI. 결론 및 과제	119
참고문헌	12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3

표목차

<표 III-1> 중국의 GDP규모와 증가율 변화 추이	31
<표 III-2> 중국의 수출입 증가 추이	32
<표 III-3> 중국의 FTA 추진현황	36
<표 III-4> 관세인하 추진계획	42
<표 III-5> 중국과 칠레·페루·파키스탄의 교역비중(2006년)	49
<표 III-6> 중국의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50
<표 IV-1>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한·중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71
<표 IV-2> 한국의 무역 중 중국의 비중	74
<표 IV-3> 중국의 무역 중 한국의 비중	74
<표 IV-4> 한·중 FTA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75
<표 IV-5> 한·중 투자규모 변화 추이	76
<표 IV-6>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주요 대상지역(2005년 현재 누계 기준)	78
<표 IV-7> 기존 한·중 FTA 연구에 나타난 GDP 증대효과	79
<표 IV-8> 한·중 교역규모 변화 추이	89
<표 V-1>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97

○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표 V-2> 북한의 주요 국가별 무역액 및 비중 98
<표 V-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의 변화 추이 99
<표 V-4>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99
<표 V-5>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입상품의 변화 추이 100
<표 V-6>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101
<표 V-7>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2000년 이후) 102
<표 V-8> 남북교역액 추이 106
<표 V-9> 2007년 중 주요 반출입품목 교역동향 108

그림목차

<그림 III-1> 홍콩의 성장률 및 1인당 GDP 변화	41
<그림 V-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9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에 부응해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해외시장 확보, 외국인 투자유치, 능동적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국가 전반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생산성 및 국민 후생 증대를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특히,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으로까지 평가된다.¹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FTA 전략도 경제통상 차원만이 아닌 포괄적 수준의 대외전략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북핵문제의 해결 및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의 협력적 구조를 창출하고, 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FTA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대경제권 중의 하나인 중국과의 FTA 추진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적 부상에 힘입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인접국이다. 또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경제발전뿐만 아니

¹ 한국은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 자원부국,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동아시아의 FTA 허브(Hub)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FTA 추진전략 및 현황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라 대외전략에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관한 민간 공동연구를 실시한데 이어 2007년부터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또한 2008년 5월에는 한·중 정상 이 한·중 FTA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향후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중국은 한·미 FTA 협상이 공식화된 작년부터 한·중 FTA 체결에 적극적 행보를 보여 왔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미·일과 협력하는 한편, 미·일 등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도 강화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강화를 상쇄하려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FTA 체결과정과도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 또한 FTA의 지역주의(Regionalism) 속성을 고려한다면, 한·중 FTA는 한·중 양자간의 협력관계를 포함해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민족문제와 국제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중 FTA는 한·중, 북·중, 남북관계 등 3자 3변 관계의 변화에 주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및 평가는 선결되어야 하는 작업이지만,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의 외교안보적 지형을 감안한다면, 한·중 FTA의 정치·외교적 영향에 관한 분석은 한·중 FTA를 균형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FTA가 주



는 정책적 함의는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강국으로 현실화하면서 점차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갖는 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FTA 전략 속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려는 경제 및 정치·외교적 의도를 추적해야 한·중 FTA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중 FTA의 정치·외교적 영향은 국내, 한·중 관계, 동북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 FTA를 정치·외교적 고려를 중시하면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한·중 FTA의 추진전략 더 나아가 한국의 FTA 추진전략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2. 기존 연구 검토

본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연구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와 남북관계의 상관성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FTA 자체가 체결 당사국간의 무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에 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도 한·중 양자간의 경제관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경제가 정상적인 교역관계로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한·중 FTA의 정치 및 외교안보적 측면에 대한 연구, 특히 경제 및 정치·외교적 효과를 종합적으

I

II

III

IV

V

VI

로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한적이거나 이러한 시도를 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정치·외교적 영향보다는 중국의 FTA 추진동기를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있다.²

반면에 한·중 FTA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한·중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국책연구원이자 한·중 공동연구의 간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중 FTA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2003년부터 KI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중·일 FTA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³ 하지만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2004년부터 한·중 FTA에 초점을 둔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⁴

구체적으로 일반균형(CGE)모형을 사용하여 한·중 FTA의 전반적인 경제효과를 추정하거나 산업별 영향을 평가하고 민감 분야나

2- 대표적인 예로, 이장규,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서창배, “중국의 FTA 정책에 담긴 정치경제적 함의,” 『한·중사회과학연구』, 제5권 1호 (2007).

3- 한·중·일 FTA 연구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종합연구기구(NIRA) 등 세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이홍식 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유관영 외,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서울: 산업연구원, 2004) 등이 있다.

4-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신태용 외,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서울: 산업연구원, 2005); Hong-Sik Lee, et al, (eds.),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5);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12권 1호 (2006), pp. 111~138.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논점은 한·중 FTA가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론과,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한 접근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중교역 구조의 특성상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으로 대별된다.⁵ 이에 관한 연구 성과들은 한·중 FTA에 관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통상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제정치적 해석을 시도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상 한·중 FTA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다른 한편, 한·중 FTA의 당사국인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 주요 특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이나 한·중·일 3국의 FTA의 일환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⁶ 중장기적으로 자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이라는 시각이 깔려있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중국의 관점에서 한·중 FTA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한다. 물론 한·중 FTA으로 인한 자국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도 일부에서 발견된다.⁷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부정적

5- 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양평섭 외,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6- 劉昌黎, 『東亞雙邊自由貿易研究』 (大連: 東北財經大學出版社, 2007); 盧海濤·陳爲國, “構建中韓自由貿易區, 促進東亞經濟一體化,” 『經濟研究導刊』, 第9期 (2007. 9); 秦燁群, 『中日韓自由貿易區對中國貿易和產業影響的實證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6); 孫曉郁 主編, 『中日韓可能建立的自由貿易區』 (北京: 商務印書館, 2006) 등을 들 수 있다.
 7- 姜憲九, “中韓建立FTA的可行性與經濟效應分析,” 『對外貿易』, 第2期 (2008. 2); 王磊, “中韓貿易合作的效應, 障礙及政策分析,” 『廣東財經職業學院學報』, 第6卷 第6期 (2007. 6); 張小濟 編, 『面向21世紀的中韓經貿合作』 (北京: 中國發展出

I
II
III
IV
V
VI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중국 내 연구는 한·중 FTA에 관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외교안보적 효과를 평가하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통상 FTA가 본질적으로 국가간의 경제적 협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FTA는 단순히 경제이익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이 아니며, 설사 경제적 목적을 위한 협력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과정에는 복잡한 국내·국제정치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정치적 현상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경제협력 및 경제적 효과에 치중한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FTA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외교적 접근을 포함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학자와 경제학자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분석과 함께 정태적인 문헌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병행했다. 북·중 및 남북관계, 대 미국·일본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질적 수준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국내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해 연구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 지역주의 속성

版社, 2006).

을 갖는 FTA의 개념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국제정치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한·중 FTA의 외교안보적 효과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논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중국이 FTA를 추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정치경제적 배경과 지금까지의 추진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이렇게 추출된 전략적 의도를 바탕으로 한·중 FTA 추진에 관한 중국의 경제적/정치·외교적 의도를 분석한 후, 한·중 FTA의 경제/정치·외교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5장에서는 한·중 FTA와 남·북·중 3자 3변 관계가 어떠한 함수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밝히고, 이에 기초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II

III

IV

V

VI

II

FTA에 관한 국제정치적 논의와 적용



1. FTA의 개념 및 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관세동맹(Custom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완전경제통합 형태의 단일시장(Single Market)과 함께 소수 회원국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주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유형이다.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적용하는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은 비회원국에 대해 회원국이 공동으로 무역정책을 수립한다. 그런 점에서 FTA는 가장 느슨한 지역 경제통합의 형태이며 RTA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FTA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이를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FTA를 규율하는 WTO 협정하의 규정으로는 ‘상품분야에 대한 GATT 제24조’와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서비스분야에 대한 GATS 제5조’가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FTA의 충족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⁸

첫째, 역내국산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들(GATT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수량규제와 GATT 제20의 일반적 예외는 필요시 제외)이 제거되어야 하며(GATT 제24조), 역내국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GATS 제5조).

⁸ 홍익표, “한·중 FTA가 북한 및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자료, 2008. 9. 12), pp. 1~2.; 더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http://www.wto.org>>.

둘째, 역외국에 대해서는 상품과 관련, 지역무역협정 체결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비스와 관련, 협정체결전보다 서비스 교역에 대한 장벽의 일반적 수준을 인상시켜서는 안 된다(GATS 제5조).

셋째, FTA를 형성하는 전 단계인 잠정협정은 FTA로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이행기간(resonable length of time)’이 부여되는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GATT 제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제3항).

1995년 WTO 체제의 출범 초기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가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FTA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효과와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FTA는 회원국간 시장이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회원국 내의 생산이 고비용 생산자로부터 저비용 생산자에게로 재배치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비회원국이 기존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무역 갈등 및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으며, 회원국 내부의 생산이 저비용 외부 생산자로부터 고비용 내부생산자로 전환됨으로써 세계경제의 효율성

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⁹

따라서 FTA는 회원국들의 무역증대, 수입가격 인하, 소비자잉여 증대 등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비회원국과의 교역위축, 투자 위축 등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에는 긍/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준다. 즉 FTA는 회원국에는 교역과 투자증대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만 비회원국에는 배타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대항적 FTA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한·중 FTA 역시 한·중 양국에는 무역증대, 투자증대 등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지만 이로 인해 제3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국제정치적 논의와 적용

FTA는 세계화 또는 다자간 무역질서에 대비되는 경제적 지역주의에 포함된다. 지역주의(regionalism)란 본래 국제정치의 한 현상으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정치·안보 및 경제적 상호혜택을 포함한 국가간 협력과 통합을 의미한다.¹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하면서 다자주의는 세계질서를 규정하는 중요 원칙이 되었으나 반면에 지역주의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의 목적을 실현시키려 하거나 경제정책(경제원조와 경제제재)을 수단으로 삼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지역주의가 이용되기도 한다.¹¹ 이런 점

⁹ 강이수 외, 『신국제통상론』 (서울: 박영사, 2007), pp. 144~146.

¹⁰ Edward Mansfield and Helen Milner, *et. al.*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p. 3~4.

¹¹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협력에 관한 의미있는 저작은 다음을 참조. Donald Barry and Ronald Keith, *Multilateralism and the Politics of Global*

에서 경제적 지역주의를 이해하려는 국제정치적 논의는 역내 국가간 협력과 지역통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만, 지역통합에 관한 이론은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발전된 논의이고 FTA는 경제통합의 가장 느슨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역주의를 국가간 협력으로 이해하고 접근한 국제정치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협력에 관한 국제정치적 접근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주도되었다. 먼저,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국가간 불평등한 세력분배구조로 인해 협력은 가능하나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생존을 위해 독립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보협력을 어렵게 하며,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의 차이를 중시함에 따라 경제협력도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약소국이 외부압력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협력을 선택할 경우, 협력을 유도 또는 강제하는 패권국이 존재할 경우, 무역의 안보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ies)로 인해 동맹국간의 경제협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¹² 안보외부효과란, 경제협력(무역)을 통한 불균등한 이득의 발생이 군사적 힘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무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유주의적 시각은 협력의 제도화가 행위자간 역내 외교안보적 이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역내 안보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안보외부효과를 거둔다고 본다.¹³

Trade (Vancouver, BC: UBC Press, 1999).

12- Joanne Gowa and Allies, *Adversaries and International Tra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참조.

13- 유현석, “경제적 지역주의의 국제정치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APEC에의 적용,” 『국제정치논총』, 제42집 3호 (2002), p. 38~48.

둘째, 자유주의는 국가가 역내 상호의존의 심화로 협력적 결정을 내리며 이로 인해 형성된 국제레짐과 같은 제도의 영향으로 상호이익을 동기로 한 국가간 협력이 유지·지속된다고 본다. 즉, 자유주의는 제도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의 강화, 국제레짐 및 제도의 확산,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출현 등으로 자유주의적 시각은 현실주의에 비해 지역협력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¹⁴ 자유주의에 속하는 (신)기능주의는 상호의존의 심화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를 통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공동의 이익을 유발시키고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파급시켜 궁극적으로 통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¹⁵

역시 자유주의에 이론적 바탕을 둔 상호의존 이론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갈등관계로 인한 관계단절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교역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간 경제관계가 증대하고 심화될수록 개방적 교역 질서를 선호하는 세력들과 이러한 경제관계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력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제관계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간 협력과 평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¹⁶ 반면에 이러한 상호의존 효과에 대해 현실주의는 부정

14. 박종철 외,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25.

15. David Mil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 1943).

16. 상호의존과 국가의 역할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은 주로 다음에 의존하고 있다. Robert,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Edward, L. Morse, *Modern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Free Press, 1976).



적이다.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가간 접촉과 이해의 증대를 의미하지 만, 다른 한편 접촉의 증대로 국가간 협력보다 갈등이 오히려 증대하 다고 인식한다. 게다가 국가간 상호의존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경우 가 더 많다는 데에 주목하고, 비대칭적 상호의존의 관계는 갈등을 더 욱 증폭시켜 오히려 국제평화를 저해한다고 보았다.¹⁷

셋째, 권력이나 이익을 강조하는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달리 구 성주의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행위주체와 구조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국가간 협력에 있어서 인식, 정체성, 규범, 개체와 구조간의 상호 구성성, 공유된 지식 등의 역할 을 강조한다. 즉, 협력에 의해 형성된 레짐이 지역 구성원들간 공통 이해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 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문화, 역사, 종교적 전통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지만 때로는 외부의 안보적 위협이나 문화적 도 전과 같은 ‘타자(the other)’의 존재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¹⁸

마지막으로, 국가간 협력을 지역수준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바 라보는 국내중심적 이론이 있다. 이는 지역주의가 형성되기 위한 국 내적 조건 및 환경에 초점을 두거나 지역주의에 대한 국내 정치사회 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역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 해 필요한 조건으로 종교, 문화, 인종에서부터 엘리트와 정치체제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국가간 협력이나 지역주의가 형성될 수

¹⁷-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는 덜 의존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상호의존이 국가 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증가시켜 근본적으로 국제관계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 지 않는다고 본다. Kenneth, Waltz,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Charles P. Kindleberger, et. al. (eds.),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70), pp. 205~223.

¹⁸- 유현석, “경제적 지역주의의 국제정치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APEC에의 적용,” pp. 41~42.

있는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지역주의의 형성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다만 국가간 협력을 국내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국가간 협력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내집단(기업, 노조 등)과 정책결정자들은 존재하며, 이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지역주의를 파악한다. 예를 들면, 지역무역협정의 참여를 명분으로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개혁에 대한 국내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행을 촉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¹⁹

이상에서 보듯이, 현실주의는 세력균형, 동맹, 패권의 개념을 중시하면서 국제체계 및 안보 중심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이익형성은 물론이고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력은 약하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와 구성주의는 이익 및 상호의존의 형성을 통한 제도화된 협력이나 제도와 행위자간의 관계, 즉 협력과정에 대해 충실한 측면은 있으나, 행위자이외의 국제수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국내 중심적 관점은 행위자 내부의 조건과 선호형성의 관점에서 지역협력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약점을 갖는다.²⁰

이상과 같은 논의들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할 때 국가간 지역협력에 대한 어느 하나의 이론적 적용은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의 FTA 추진의도와 그것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찾으려는

¹⁹-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Summer 1999).

²⁰- Andrew Hurrell, "Regionalism in Theoretical Perspective," Louise Fawcett, Andrew Hurrell,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47~70.

본 연구에는 더욱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국의 FTA 추진동기를 분석하고, FTA 체결국의 내·외부적 영향 및 효과를 평가하려는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일국의 FTA 추진동기와 관련하여 이상의 관점들을 적용하면 일국의 FTA 추진목적은 다양하다. 즉, 현실주의는 안보이익을, 자유주의는 경제이익과 상호의존을, 구성주의는 지역질서 형성을 국내 중심적 이론은 국내정치적 영향을 중시한다. 지역주의의 한 형태인 FTA에 참여하려는 동기는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과 이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경제외적인 요인, 즉 국내정치적 고려와 회원국 내외의 외교안보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고 있다. 중국 역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서 FTA를 추진하면서 국내의 정치경제적 이익과 외교안보적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의 한·중 FTA에 관한 추진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외교안보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분석은 한·중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즉,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 및 효과만이 아닌 정치와 외교안보적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한·중 FTA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의도출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선 자유주의적 관점의 상호의존효과와 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의 효과는 한·중 FTA가 한·중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함의를 분석하는데 주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안보외부효과 역시 한·중 FTA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치안보지형에 대한 영향 및 효과를

검토하는데 적용 가능하다. 게다가 국내 중심적 이론이 주목하는 국내정치적 영향은 한·중 FTA의 국내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I

II

III

IV

V

VI

III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사례



1. 추진배경

중국은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건설을 공식 선포하고 전방위 개방외교를 추진하였지만, FTA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전후해 중국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일국의 FTA 정책은 국내경제 및 대외무역의 발전 등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평화와 안정,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외교안보적 이익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된다. 중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선회한 배경을 정치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가. 정치적 배경

FTA가 협상 및 체결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정치적 배경에는 대외전략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이 고려하는 정치적 이익은 대외전략적 측면과 함께 국내정치적 측면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정치적 배경은 국내정치적 측면과 대외전략적 측면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먼저, 국내정치적 배경을 보면, 중국은 FTA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체제안정 및 당 지배체제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9%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 4위의 경제규모로 급부상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지역 및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이

I
II
III
IV
V
VI

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삼농(농촌·농업·농민)문제, 부패문제, 소수민족문제 등이 어우러지면서 누적된 사회적 불만은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체제는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이라는 장기적 비전하에 ‘사회주의조화사회론’을 제기하면서 균형과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왔다.²¹ 이러한 방향은 17차 당 대회에서 지도이념으로 확정된 ‘과학적 발전관’으로 계승되었다. 과학적 발전관은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 성장을 중시하면서도 사회변화 및 발전에 수반되는 에너지, 환경 및 균형발전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발전관이라 할 수 있다.²² 이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의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개혁개방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기존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당과 민족 등 전체 국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하고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은 개혁개방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제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당 지배체제의 정통성을 유지·보완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성과가 필요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며, 2020년 소강사회, 더 나아가 2050년 사회주의현대화 실현이라는 장기적인 구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은 개혁개방의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체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²¹ ‘사회주의조화사회론’은 2004년 9월 16기4중전회에서 처음 제시된 후 2005년 3월 10기전인대 3차회의에서 공식화되었는데, 개혁개방의 각종 부작용을 함께 치유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후진타오체제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서 기능하였다.

²² 『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北京: 人民出版社, 2007), pp. 1~55.

2020년 소강사회를 실현하려는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FTA 추진배경의 대외전략적 측면은 탈냉전 이후 중국의 대외인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냉전 종식 후 중국은 ‘평화와 발전’의 가치를 내걸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방위의교를 추진하면서 다극화전략을 구사해왔다. 중국의 다극화 전략은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의 단극체제 또는 일방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극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타의 강대국과 동반자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서 다자간 외교를 중시하기 시작했다.²³

중국은 이를 통해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주변국의 경계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주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실제로 중국은 유엔을 비롯한 ARF 등 국제다자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 10+1, 10+3,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 등 다자주의 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은 중국을 세계 정치경제질서에 급속히 편입시킴과 동시에 중국의 종합국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전후해 중국은 세계화와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즉, 세계화 추세는 거역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참여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긍정적이라 인식하는 한편,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역주의를 동시에 주목하였다.

²³- 16대의 정치보고에서 장쩌민(江澤民)은 “적극적으로 다자외교 활동에 참여하여 UN 및 기타 국제기구 혹은 지역성 기구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개발도상국가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北京: 人民出版社, 2002), p. 47.

그렇다고 세계화와 지역주의를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한 것은 아니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지역주의를 다자주의로 포용하였다. 즉, 중국이 인식하는 다자주의에는 지역적 차원이나 수준의 다자주의(regional multilateralism)와 세계적 차원이나 수준의 다자주의(global multilateralism)를 포함한다.²⁴

이러한 인식은 WTO체제 하에서도 북·미자유무역지대와 유럽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1997년의 동아시아 경제위기 시 지역협력 기제가 부재하였다는 경험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다자외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걸맞은 주변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주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주변국(지역)에서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주변국과의 FTA 체결은 경제협력은 물론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주변정세의 안정과 주변국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안보적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는데 유용하며, 특히 역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와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세안, 홍콩, 한·일,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FTA 추진은 대외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05년부터 후진타오의 새로운 외교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화세계론’은 주목된다.²⁵ 이에 의하면, 국내차원에서는 ‘조화사회(和諧社會)’의 건설을, 주변국에 대해서는 ‘조화로운 아시아(和諧亞洲)’의 건설을, 전 세계 차원에서는 ‘조화세계(和諧世界)’의 건설

²⁴- 秦亞青, “多邊主義研究: 理論與方法,”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1), pp. 9~10.

²⁵- 200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9월 유엔 60주년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당·정 지도부가 조화세계 건설을 점차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3월 10기 전인대 5차회의의 정부공작보고에서도 재차 강조됨으로써 새로운 외교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발달한 국가와는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가와는 단결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우호협력을 중시하면서 다자외교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실리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의 FTA 추진배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이 평화, 발전, 협력, 안정, 공동번영, 화합, 평등, 공정, 상호존중 등의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자유, 민주, 인권 등 미국식 가치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점을 들 수 있다.²⁶ 즉, 기존의 평화와 발전의 기치 하에 대국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패권국인 미국과의 대결이 아닌 상생의 길을 다자의 틀 내에서 함께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참여자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국제질서의 규범을 만들 수 있는 대안 소유자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자국의 발전이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과의 협력과 공동번영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권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²⁷

두 번째는 중국이 ‘중국위협론’이나 ‘중국붕괴론’이 아닌 ‘중국역할론’ 또는 ‘중국기회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창출하고자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강조한다. 그 연장선상에 ‘조화로운 아시아’ 건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²⁶ 俞新天, “諸世界與中國的和平發展道路,” 『國際問題研究』, 第1期 (2007), pp. 7~8.

²⁷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2006년 11월 북경에서 41개국 아프리카 정상을 초청한 중국-아프리카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嚴震生, “中非合作論壇,” 『展望與探索』, 第4卷 第12期 (2006. 12), pp. 15~23.

점에서 조화세계론은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선린 외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조화세계론을 통해 외교이념의 평화성, 군사전략의 방어성, 안보협력의 협력성, 각국의 자주성 및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평화안정의 국제환경, 선린우호의 주변 환경, 평등호혜의 협력환경, 상호협력의 안보환경을 형성하고자 한다.²⁸ 실제로,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를 통해 신뢰구축과 안정된 안보환경의 확보를 추구해왔으며, 대표적인 예로 2002년 11월 아세안과의 FTA 설립에 합의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나. 경제적 배경

중국이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경제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1979년부터 30년 동안 시기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개혁개방정책을 점차 확대해왔다. 대내적으로는 시장화와 사유화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을 추진해왔고, 대외적으로는 점진적 개방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와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세계경제체제에 적극 편입해갔다.

그 결과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표 III-1>에서 보듯이, 2007년 현재 중국의 GDP는 24조 6,619억 위안(元)으로 1979년 대비 약 60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은 해외 직접투자와 무역을 증대시킴으로써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WTO 가입 이후인 2002년

²⁸- 國紀平, “好隣居, 好朋友, 好伙伴,” 『人民日報』(2006. 12. 11).

부터 중국의 GDP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 중국의 GDP규모와 증가율 변화 추이

연 도	'79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GDP(억 원)	4,038	84,402	89,677	99,215	109,655	120,333	135,823	159,878	183,868	211,233	246,619
전년대비 증가율(%)	7.6	7.8	7.6	8.4	8.3	9.1	10.0	10.1	10.4	11.6	11.9

출처: 『中國統計年鑒』, 각 년판과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www.kita.net>>.

또한 <표 III-2>에서도 확인하듯이, WTO 가입 이후인 2002년부터 중국의 무역증가율이 매년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른 무역의존도도 2001년 38.5%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65.7%, 2007년 64.4% 등 60% 이상까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중국경제가 국내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외개방을 심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I

II

III

IV

V

VI

<표 III-2> 중국의 수출입 증가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 도	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 수지	무역의 존도 (%)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2001	5,096.5	7.4	2,661.0	7.0	2,435.5	8.2	225.5	38.5
2002	6,207.7	21.8	3,256.0	22.1	2,951.7	21.2	304.3	42.7
2003	8,509.9	37.1	4,382.3	34.6	4,127.6	39.9	254.7	51.9
2004	11,547	35.7	5,934	35.4	5,614	35.8	320	59.7
2005	14,221	23.3	7,620	28.4	6,601	17.7	1,019	62.4
2006	17,611	23.8	9,693	27.2	7,918	19.9	1,775	65.7
2007	21,738	23.5	12,180	25.7	9,558	20.8	2,622	64.4

출처: 『中國統計年鑒』, 각 년판과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www.kita.net>>.

이점은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지속적인 경제발전 달성을 위해 세계경제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그에 따른 경제발전전략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WTO와 같은 다자주의에도 적극 동참해야 되지만, 경제통합 및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지역주의와 양자주의의 추세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신해 탄생한 WTO에 2001년에서야 가입한 중국은 그 해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결렬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목도하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불공정한 거래와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²⁹⁾

더욱이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유럽연합(EU, 1993), 북·미자유

²⁹⁾ 楊洁勉, 『國際體系轉型和多邊組織發展』(北京: 時事出版社, 2007), pp. 109~114.

무역지대(NAFTA, 1994),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5), 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1993), 걸프협력회의(GCC, 1983) 등 지역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FTA 체결을 위한 논의만 이루어질 뿐 아세안을 제외하고 아직 경제협력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경제적 지역화는 역내 국가에 무역증대와 투자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반면,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외무역의 발전과 투자유치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해 지역 경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WTO체제의 한계와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2005년 확정된 11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다자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및 양자간 경제협력을 추동하고 세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한데서도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중국은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FTA 체제를 구축해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와 경제무역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와 대외무역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³⁰

또한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에 FTA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2005년 7월 발표한 ‘지역경제협력 참여 전략’에 의하면, 중국은 FTA를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지역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시장개척, 주요 채널 및 에너지·

30.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的建議,”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中)』(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6), p. 1076.

I
II
III
IV
V
VI

자원 확보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³¹

이처럼, 중국은 FTA를 중국의 대외경제 무역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 및 지역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해외로부터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引進來)’ 발전전략에서 ‘해외로 진출하는(走出去)’의 발전전략을 병행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지속적인 무역흑자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전략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 다국적 경영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촉진, 선진기술 도입, 에너지·자원 공급선 확보 등을 도모해왔다.³²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중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FTA는 국내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투자를 더 많이 유인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실시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³³

³¹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세안과 홍콩·마카오·대만과의 지역경제협력지대 형성,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추진, 러시아, 호주,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 개척,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와 지역경제협력 추진, 미국 및 유럽에 개별 FTA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具備區域經濟合作基礎：商務部初定中國策略” <<http://www.gx.xinhuanet.com>> (검색일: 2005. 7. 11).

³² 백권호·서석홍,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走出去)의 현황과 평가,” 『중국학연구』, 제35집 (2006. 3), pp. 283~307.

³³ 劉昌黎, 『東亞雙邊自由貿易研究』, p. 232.

2. 추진현황 및 사례

가. 추진현황

(1) 추진개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주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중국이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국가들은 약 30여개 국가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FTA의 추진과정은 3단계로 구성된다. 즉, 당사국간 FTA의 추진의사를 확인하면 우선 FTA의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전개하여 FTA 협정 최종 합의에 도달한 후, 마지막으로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 의해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 <표 III-3>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1단계인 공동연구 중인 국가는 한국, 일본, 노르웨이, 인도, 상하이협력기구(SCO: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며, 2단계인 협상중인 국가는 호주,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그리고 3단계인 협상체결국은 홍콩,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등 5개국(지역)이다.³⁴

I

II

III

IV

V

VI

<표 III-3> 중국의 FTA 추진현황

국가	체결시기	발효시기	제안자	협정범위
홍콩	2003.6.(1단계) 2005.1.(2단계) 2007.1.(3단계)	2004.1.	중국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아세안	2004.11. 2007.2. (서비스)	2005.7. 2007.7. (서비스)	중국	상품무역, 서비스무역(후타결)
칠레	2005.11.	2006.10.	칠레	상품무역
파키스탄	2006.11.	2007.7	중국	상품무역, 투자
뉴질랜드	2008.4.7.	2008.10.1	중국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호주	협상 중	-	중국	-
GCC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연구검토	-	중국	-
한국				
일본				
SCO				
노르웨이				

³⁴ 중국은 2003년 6월 29일 홍콩과 “경제관계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FT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내용상으로 FTA에 준하는 협정이므로 FTA에 포함시켰다.

(2) 공동연구현황

중국이 현재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중인 FTA는 한·중·일 FTA와 한·중 FTA, 노르웨이, 인도 및 SCO와의 FTA가 있다. 한·중·일 FTA는 2002년 11월 아세안+한·중·일 회의에서 중국의 제안으로 공동연구가 시작되었으나, 2004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태도와 중·일간 정치적 갈등 및 긴장관계로 중단되었다. 반면에 한·중 FTA는 -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로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중 FTA를 체결한 후 한·일 FTA를 통해 한·중·일 FTA를 달성함으로써 아세안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룬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비록 일본과의 경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2008년 5월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에 합의함에 따라 한·중·일 FTA에 관한 논의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와의 FTA는 2003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2020년 이전 상품, 자본, 서비스,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2006년 10월부터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옵서버로 참여하는 아프카니스탄, 몽골 등이 FTA 가능성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통, 에너지, 무역 등이다.³⁵ SCO는 상하이5국(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출발해 2001년에 창설된 다자기구로서 안보협력에서 점차 경제협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다자안보기구로도 주목되고 있다.³⁶ 또한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35- 朱成虎, 『十字路口:中亞走向何方』(北京:時事出版社, 2007), p. 398.

36- 李敏倫, 『中國'新安全觀'與上海合作組織研究』(北京:人民出版社, 2007), p. 81.

에너지와 교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을 확충함으로써 중국의 서부대개발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인도와의 FTA는 2005년 4월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제안에 의해 2006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모두 5차례의 공동연구가 추진되었다. 양국간 상품,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등 지역경제협력과 분업체계 및 단계별 접근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개발도상 대국으로서 최근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 양국의 FTA 논의는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주변국인 인도와 영토분쟁 및 티베트 문제로 소원한 관계를 청산하고, 인도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FTA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협상전개현황

2008년 현재 중국이 FTA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는 총 6개국이다. 이 중 주요 국가는 호주, GCC, 아이슬란드를 들 수 있는데, 호주는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국가 중 가장 발달한 국가이며, 아이슬란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로서 의의가 있다. 또 GCC는 세계 최대의 석유보유 지역으로서 의미가 있다.

호주의 경우, 중국은 2003년 8월 원자바오 총리의 제안으로 2004년부터 양국간 FTA의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였다. 공동연구가 조기에 종료된데 비해 양국의 협상은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농산물 및 상품 진입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왔지만 서비스 무역, 기업 투자 환경 및 제도 미비, 원산지 규정 등

의 문제에서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중국은 호주와의 FTA를 통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호주의 광물 자원 및 원자력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GCC와의 FTA 협상은 2004년 7월 중국을 방문한 GCC의 사절단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중국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즉, 양측이 FTA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공동연구를 거치지 않고 2005년 4월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GCC는 중국의 직물, 의류, 전자제품 등에 수요가 있으며, 중국은 GCC의 석유 및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에 막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GCC는 1981년에 창설된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세계 2위의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지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 지역의 에너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와의 FTA는 2005년 5월 양국간 FTA를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하였고, 2006년에 종료하였다. 2007년 4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상품,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2006년 10월부터 아세안과의 기존 FTA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2007년 5월부터 페루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나. 체결사례

2008년 8월 현재 중국이 FTA 협상을 체결한 사례는 홍콩·마카오,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지역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국가/지역과의 FTA 체결과정에 나타난 중국의 의도 및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I

II

III

IV

V

VI

(1) 중·홍콩/마카오 CEPA

중국과 홍콩의 CEPA는 2002년 초 중국정부가 제안한 후, 2003년 6월 홍콩, 10월 마카오와 기본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5년 10월 보충 협정을, 2006년 6월 신보충협정을 체결하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³⁷ 이 CEPA는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어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실험장이 된 홍콩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합의과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합의 내용도 수입관세 면제,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등 일반 FTA의 수준을 넘는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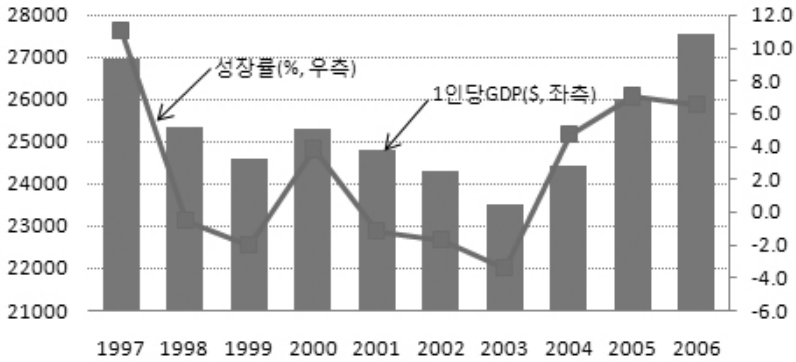
이처럼 중국이 홍콩과의 CEPA를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체결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통합의 대상인 홍콩의 특수한 지위에서 찾을 수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경제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등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반중 정서가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홍콩 경제의 침체와 반중 정서의 확산은 대만과의 통합 모델인 일국양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과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조치로 CEPA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림 III-1>에서 보듯이, 홍콩의 1인당 GDP와 성장률이 2003년 이후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대중 직접투자액도 2000년 155억 달러에서, 2003년 177억 달러, 2006년 202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7- 劉昌黎, 『東亞雙邊自由貿易研究』, pp. 234~235.

38- 오동윤, “중국·홍콩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협정’ 내용과 시사점,” 『월간 KIEP 세계경제』, 제6권, 8호, 통권 59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8), p. 39.



<그림 III-1> 홍콩의 성장률 및 1인당 GDP 변화



출처: 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2006)> 이용하여 작성.

이러한 수치는 CEPA가 중국의 의도대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내지인 광둥성과 홍콩·마카오의 경제통합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대만과의 경제협력 내지 통합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화남경제권 형성, 더 나아가 대만과 아세안을 포괄하는 대중화 경제권 형성이란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⁹

(2) 중·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는 2000년 11월 제4차 아세안+1 정상회담 기간 중 중국 주룽지 총리의 제안으로 타당성을 연구·검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2001년 11월에 추진에 합의하고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후 총 17차에 걸친 협상을 거친 끝에 2004년 11월 상품분야 관세인하 협약에서

³⁹ 박장재, “광둥의 화교경제와 중국-홍콩간 CEPA 체결의 영향,” 『중국학연구』, 제26집 (2003. 12), pp. 48~49.

명함으로써 중국은 세계 최초로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아세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 2007년 2월 서비스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 체결한 기본 협정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상품분야 관세철폐가 발효되었는데, 아세안 10개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선발 6개국(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과 후발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관세인하 계획은 <표 III-4>에서 보듯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민감도에 따라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다.

<표 III-4> 관세인하 추진계획

구분		선발6개국	후발4개국
조기자유화		2006년까지 관세 완전철폐	
일반		2012년까지 관세철폐	2018년까지 관세철폐
민감	일반민감	2018년까지 관세율 5% 이하	2020년까지 관세율 5% 이하
	고도민감	2015년까지 관세율 50% 미만	2018년까지 관세율 50% 미만

출처: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7-47호, 2007.11.18~11.24, p. 22

지금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FTA는 상품교역 중심의 낮은 수준에서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아직 특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극적인 양보와 타협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제외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⁴⁰

첫째, 중국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화를 추진하여 지역안보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002년 11월 제6차 중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주룽지는 “중국과 아세안은 안보영역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 아세안 각국과 선린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 반테러활동을 포함해 아세안 국가의 민족단결과 사회 안정에 대한 노력을 지지한다.”⁴¹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상호신뢰와 상호이익 그리고 평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 안보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조성 및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대외전략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세안은 중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중국은 이들과의 지역통합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의도하고 있다.⁴²

둘째, 중국과 아세안간의 지역통합화는 궁극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미국 패권에 대한 대응과 일본의 주도권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강화된 발언권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⁴³

⁴⁰- 중국이 아세안과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양보와 타협적인 예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WTO 비회원국에도 회원국과 동등한 최혜국대우를 한 점, 중국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농업분야를 개방한 점, 동남아시아와 인접한 메이공허(湄公河) 유역의 전면 개발협력에 합의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전병곤, “중국의 다자주의 지역전략: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0권 1호 (2003), p. 141.

⁴¹- 『人民日報』, 2002年 11月 5日.

⁴²- Sheng Lijun, “China-ASEAN Free Trade Area: Origins, Developments and Strategic Motivations,” *ISEAS Working Paper: International Politics & Security Issues Series*, No. 1 (2003), pp. 6~18.

I
II
III
IV
V
VI

중국의 이러한 의도는 2002년 11월의 중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건의한 주룽지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중국은 지역 협력 중에 아세안과의 협조를 강화하기를 바라며, 아세안이 동아시아 협력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⁴⁴라고 표명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아세안과의 10+1회의를 바탕으로 보다 확대된 10+3(아세안 + 한·중·일)회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 통합을 논의하는 지역 다자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칠레 FTA

중·칠레 FTA는 2002년 칠레가 먼저 제안한 후, 2004년 11월 APEC 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2005년 1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05년 11월 FTA 상품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10월 정식 발효되었다. 중·칠레 FTA에는 상품무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서비스와 투자부문에 대한 협상은 동 FTA가 정식 실시된 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상품 관세의 철폐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중국과 칠레의 자국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감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양국간의 마찰을 줄이고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6년 FTA가 발효된 이후 2007년 중국의 대 칠레 수출은 41위에서 38위(약 44억 달러), 수입은 25위에서 20위(약 102억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각각 42%와 80%를 기록했다.⁴⁵ 이는

43- 曹雲華, “中國加入WTO對中國與東盟關係的影響,” 『中國外交』, 第3期 (2002), p. 23.

44- 『人民日報』, 2002年 11月 5日.

45-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무역통계 <<http://www.kita.net>>.



중국과 칠레의 FTA가 양자간 교역 증대와 시장 개척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한 양국간의 교역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적극적인 FTA 정책에 호응하는 한편 양국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이 적은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점, 칠레가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구리) 보유국이라는 점과 중국이 FTA를 체결한 남미 최초의 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중국이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주요 목적은 무역증대 뿐만 아니라 칠레의 광물 및 임산자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칠레를 중국기업의 남미 투자진출 및 교역의 교두보로 삼으려는데 있다고 평가된다.

(4) 중·파키스탄 FTA

중·파키스탄 FTA는 2004년 12월 파키스탄 총리의 방중시 중국정부가 제안한 후, 2005년 4월 협상을 개시하였고 2006년 11월 24일 체결되어 2007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처럼 제안에서부터 발효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파키스탄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낮은 산업화 수준과 적절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에 최적의 FTA 상대국이었다는 데에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상품무역협정 및 투자 촉진과 보호, 투자대우, 징수, 손해보상 및 투자분쟁 해결 등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중국기업의 대 파키스탄 투자를 촉진·확대시킴으로써 파키스탄을 중동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운반하는 통로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다. 중동의 원유를 해상보다 육로를 통해 수송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이는 중국의 서부대개발 촉진과 연계되어 있어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중국

I
II
III
IV
V
VI

이 인도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관계를 강화시켜온 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FTA를 통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송망 확보와 대인도 견제라는 외교안보적 목적을 갖고 있다.⁴⁶

(5) 중·뉴질랜드 FTA

중국은 2003년 뉴질랜드와 FTA 논의에 합의한 후, 2004년 11월 APEC 회의에서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협상할 것에도 합의했다. 그해 12월부터 3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양국은 2008년 4월 7일 FTA를 체결하였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상품,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⁴⁷

중국과 뉴질랜드와의 FTA는 2008년 10월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발달한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FTA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중국은 자원 확보 및 무역마찰 회피를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 유도, 산업경쟁력 제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⁴⁶ 정환우, “과육과 현실적 제약의 딜레마: 중국의 FTA 경험,” 『현대중국연구』, 제9집 2호 (2008. 2), pp. 201~204.

⁴⁷ 김한성·여지나, 『중국·뉴질랜드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p. 1~8.

3. 전략적 의도 분석

여기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현황을 통해 나타난 전략적 의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중국의 FTA 추진과정과 추진동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가. 추진과정 분석

중국의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패턴을 통해 볼 때,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자 한다.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추진된 것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0여개 국가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5개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했으며, 11개 국가/지역과 FTA 협상 및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칠레를 제외하면 중국이 먼저 다른 국가에 FTA를 제안했다는 점, 협상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중국의 FTA 추진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대상국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협상형식도 양자협정과 다자협정 그리고 합의내용도 낮은 수준에서 포괄적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추진대상국이 아시아에서 중남미(페루), 아프리카(남아공), 유럽(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추진형식도 양자협정과 권역별 다자협정(아세안, SCO, GCC 등)으로 구분되며, 낮은 수준(아세안·칠레)에서 포괄적 수준(뉴질랜드·파키스탄)으로 확대되고 있고,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 아세안과 칠레와의 FTA도 점차 서비스·투자 분야로 협상을 확대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셋째, 중국은 FTA 추진 대상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나 지역을 먼저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규모가 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FTA 추진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협상력 및 경험을 축적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강화해 그동안 중국이 주창해온 개도국 이익의 대변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선진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도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넷째, 중국의 FTA 추진 대상국/지역은 대부분 아시아 즉, 중국의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다. 중국은 이미 FTA를 체결한 동남아(홍콩, 아세안), 서남아(파키스탄) 외에, 협상 단계인 중동아(GCC 회원국), 연구단계인 동북아(한국·일본), 서남아(인도), 중앙아(SCO 회원국) 등 주로 주변국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FTA를 통해 대국으로서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주도국으로 부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이와 관련 중국은 동아시아 FTA를 주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이 우선적으로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한 점이나,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한·중·일 회의에서 한·중·일 FTA를 제안한 점도 그렇다. 일본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10+1)를 모태로 10+3로 확대하거나,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일 FTA와 중·일 FTA를 통해 한·중·일 FTA를 체결해 동아시아 FTA를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협력체를 주도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FTA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양보와 타협은 중국이 FTA를 전략적인 고려 하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 효과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과 주변지역에 집중된 점 등도 그렇다. 앞의 체결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통합의 대상인 홍콩을 제외하더라도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과의 FTA는 교역비중이 낮거나 체결 후 경제적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표 III-5> 참조). 따라서 중국의 FTA 추진은 일반적인 통상전략의 측면만이 아닌 외교안보적 측면이 고려된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중국과 칠레·페루·파키스탄의 교역비중(2006년)

(단위: %)

구 분	수출비중	수입비중
칠 레	0.3	0.7
페 루	0.1	0.4
파키스탄	0.4	0.1

출처: 중국해관 통계.

나. 추진동기 분석

상술한 바처럼, 중국은 다양한 지역 및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중국의 FTA 추진 동기도 그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해외시장 개척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선진기술 획득, 산업경쟁력 제고, 국내개발, 화교네트워크 및 중화경제권 형성, 에너지 자원 확보, 지역협력안보, 지역주도권 강화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II
III
IV
V
VI

<표 III-6> 중국의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추진동기	주요 해당 국가
해외시장 개척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한국, 호주, 아이슬란드, 인도, 칠레, 파키스탄, 아세안
국내개발(서부대개발·동북진흥개발)	한국, 파키스탄, GCC
선진기술획득	한국,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호주
산업경쟁력 제고	홍콩,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한국
에너지·자원 확보	GCC, SCO,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
화교 네트워크 및 중화경제권 형성	홍콩, 아세안
지역협력안보	아세안, SCO
지역주도권 강화	아세안, 파키스탄, 한국

첫째, 중국은 신규 해외수출시장 개척 및 중국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3년간 급증하는 무역흑자로 인해 무역마찰, 시장개방,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 등을 겪게 되었다.⁴⁸ 이런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시장과 수출 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역흑자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무역흑자 대상국은 FTA의 체결을 통해 무역마찰을 완화하는 한편, FTA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중국이 추진하는 FTA 전반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특히 칠레, 파키스탄, 호주 등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이라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내개발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야심찬 서부대개발과 동북진흥계획을 제시한

⁴⁸ 중국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 12년간 세계 최다 무역분쟁 발생국가로서 신시장과의 자유무역 추진은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 인접국과의 FTA를 활용하고자 한다. 서부대 개발의 경우, 인접한 SCO 및 파키스탄과의 에너지 협력 및 수송망 확충은 서부대개발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또 동북진흥개발의 경우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FTA를 통한 기술이전 효과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단기간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투자기업에게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외국 투자기업의 기술이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해외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해외진출(走出去)’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FTA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로 인한 기술이전 외에도 상대국에 대한 M&A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기술이전의 효과를 위해 선진국인 한국, 싱가포르, 호주, 아이슬란드 등 국가와 FTA를 시도하고 있다.

넷째, 산업경쟁력 제고이다. FTA를 추진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시장접근성을 강화하고 산업고도화 촉진을 도모한다. 투자환경 및 제도, 금융, 서비스산업이 취약한 중국의 입장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FTA 대상국으로는 중소 규모의 선진국인 홍콩,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 에너지 자원의 확보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 및 원자재 수요 급증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석유, 희귀 광물자원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GCC, SCO와, 에너지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및 광산개발을 위해 파키스탄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칠레(구리), 호주(아연·니켈·철광석), 아이슬란드(알루미늄)도 주요 자원보유국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여섯째, 화교네트워크 및 중화경제권 형성이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것처럼, 홍콩·마카오와의 FTA는 중국이 통합의 대상으로서 또 향후 통합해야 할 대상인 대만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역시 화교의 주요 경제활동지역이다. 중국은 이들 지역과 중국 내지와의 경제적 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홍콩 포함 대만을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아세안까지 포괄하는 중화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협력안보이다. 중국이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주로 주변지역이다. FTA를 통한 경제교류협력의 강화는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시켜 지역통합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에 FTA는 유리한 수단이 된다. 최근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바, FTA는 이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⁴⁹ 즉, FTA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유리한 주변 환경 창출과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의 추진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세안과 SCO와의 FTA 추진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SCO는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의 분리·독립 운동 및 테러를 차단함

⁴⁹ 김재철, “중국의 경제외교: 경제적 고려를 넘어서,” 『국가전략』, 제13권 4호 (2007), pp. 41~67.

으로써 변경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로서,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의 FTA 추진은 지역협력 안보라는 외교안보적 의도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여덟째, 이와 관련 중국은 주변국과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역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이 FTA를 수단으로 주변지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는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대응이며 역내 차원에서는 인도 및 일본의 주도권 및 영향력에 대한 견제이다.

중국의 대외전략 특히,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세계 유일 초강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협력하면서 국력신장을 도모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지역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현실적·실리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FTA는 상대국과 공동이익과 의존성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안보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가장 두드러지게 발휘되는 FTA는 SCO와 아세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밖에 파키스탄과의 FTA는 인도에 대한 견제라는 전통적 의도 이외에 최근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시도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호주 및 인도와의 FTA 추진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미·일 중심의 아태민주연대의 결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칠레·페루와의 FTA 추진도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의 <표 III-5>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와 중국의 매우 미미한 수준의 교역

I
II
III
IV
V
VI

비중은 중국이 경제적 고려보다 미래 전략적 가치를 우선해 FTA를 추진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상 중국이 FTA를 추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종합하면, 해외시장 개척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선진기술 획득, 산업경쟁력 제고, 국내 개발 등은 FTA 추진의 일반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나, 화교네트워크 및 중화경제권 형성, 에너지 자원 확보, 지역협력안보, 지역주도권 강화는 정치적 또는 외교안보적 측면이 포함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한·중 FTA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나, 외교안보적 측면이 포함된 목적은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즉, 화교네트워크 및 중화경제권 형성, 에너지 자원 확보는 한국의 현실상 중국의 추진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지역 협력안보나 지역주도권 강화는 한·중 FTA를 추진하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IV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영향



1. 추진경과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한·중·일 FTA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ASEAN과 FTA 체결에 합의한 직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안하였으나, 중·일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커다란 진척을 보이지는 않았다.⁵⁰ 그러나 2003년 10월 한·일 FTA 협상이 개시되자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결과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되는 시점인 2004년 11월 ASEAN+3회담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은 2년간 민간에 의한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⁵¹ 이에 따라 양국의 간사기관인 중국의 국무원 산하 세계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중심으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한·중 FTA의 한·중 경제협력 현황,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중 FTA의 무역 및 투자효과, 한·중 FTA의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어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인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⁵² 산·관·학 공동연구에는, 정부 측으로 한국의 외교통상부 및 관련 부처와 중국의 상무부 국제사(國際司) 및 관련부처가, 학계로는 한국의 KIEP, 농촌경제연구원,

⁵⁰ 중국은 일본이 경제발전과 대외적 지위 향상 및 안전보장, 특히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주도권을 고려 중국을 FTA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일 FTA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劉昌黎, “論日本政府回避中日自由貿易區的原因與中國的對策,” 『世界經濟』, 第12期 (2006), pp. 60~65.

⁵¹ 당시 한·일 FTA 논의 진행과 균형을 맞추려는 측면도 있었다.

⁵² 국정브리핑, 『한·중 FTA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합의』 (2006. 11. 17).

해양수산개발원 등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상하이 WTO Consulting Center가, 민간단체로는 무역협회와 전경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사실상의 예비협상단계로 간주되는 바, 이러한 전격적인 합의의 배경에는 당시 진행 중인 한·미 FTA의 공식 협상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미 FTA의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우리 측의 입장과 한·미 FTA에 자극을 받은 중국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실제로, 2006년 2월 한·미 FTA의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자 2006년 3월 당시 중국의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이 한국과의 FTA 추진을 공식적으로 희망한 바 있다. 또한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 직후인 2007년 4월 10일 방한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역시 한·중 FTA에 관한 공동연구의 조속한 결과를 촉구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⁵³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는 2007년 3월 베이징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양국을 오가며 모두 5차례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상품교역, 서비스 및 투자, 기타 이슈 및 정책제안의 3단계별 접근 등 공동연구 추진의 기본 원칙 및 향후 작업계획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차 회의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민감 품목 상호교환 및 검토, 상품 관련 이슈 등을 협의하였고,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석유화학, 섬유 및 의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비철금속, 고무, 화장품, 종이·판재·종이제품 등 공산품 10개 분야와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구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협의하였으나, 농업 분야에서는 상호 이견을 노정하였다.

53. “溫家寶在中韓經濟界午餐會上發表演講” <<http://www.fmprc.gov.cn/chn/wjdt/zyjh/t310601.htm>> (검색일: 2007. 5. 24).

2008년 2월의 4차 회의에서는 농림수산업 및 결론/권고 문안을 제외한 전 분야, 즉 상기 10개 제조업 분야와 지적재산권, 에너지·환경 협력 분야 등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 내용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의류, 비철금속, 제지 등 일부 업종에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양국의 이견차가 노정되었다. 즉 중국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한국의 상대적 고관세 등을 감안할 때, 한·중 FTA 체결 시 중국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는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중국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출 증가폭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측은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양국 수산업의 생산 구조 및 소비자 기호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중 FTA 체결 시 수입 증대 및 생산 감소 등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중국 측은 중국의 국내 수요 증가, 생산비용 상승, 한국의 여타국과의 FTA 체결로 한·중 FTA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중 FTA의 추진원칙 및 정책제언이 포함될 결론/권고 부문에서는 포괄성(comprehensive), 실질적 자유화(substantial liberalization), 민감 부분의 고려(consideration of sensitive sector) 등이 추진 원칙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 측은 협상 개시 이전에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자는 입장이나,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2008년 10월 현재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당초 4차 회의로 종료할 예정이던 공동연구가 5차까지 연장되었다. 중국은 2008년 6월 10일부터 14일

I
II
III
IV
V
VI

까지 예정된 5차 회의의 진전을 의식해, 2008년 5월 27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한·중 FTA를 상정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중국의 요구로 ‘한·중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에도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차 회의에서도 양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공동연구의 최종 결론 도출은 6차회의(미정)로 미루어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한·중 FTA의 추진경과를 보면, 중국 측은 한·중 FTA 추진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반면, 한국 측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이 지속되고 한국정부가 이에 호응함으로써 양국간의 이견이 좁혀진다면 산·관·학 공동연구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된다면, 양국은 공동연구 결과를 양국 정상에 보고한 후 한·중 FTA의 공식적인 협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농림수산업 등 민감 분야에 양국의 입장이 고수될 경우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종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동연구의 지속은 한·중 FTA의 협상개시가 지연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공동연구는 본격적인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한·중 FTA 추진경과 및 추세를 감안할 때, 협상개시의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공식 협상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 협상 개시 후 협상전개 및 발효까지의 체결 과정에 약 2~3년의 시일이 소요되는 바, 향후 한·중 FTA가 최종 완성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추진의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은 한·중 FTA를 적극적이고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3장에서 분석한 중국의 FTA 추진의 전략적 동기와 의도를 한·중 FTA에 적용하면, 중국의 한·중 FTA 추진 의도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다. 즉, 경제적 측면과 정치·외교적 측면이 모두 함유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일반적인 FTA 추진 의도인 해외 시장 개척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선진기술 획득, 산업경쟁력 제고, 국내개발 등은 한·중 FTA 추진의 경제적 의도를, 지역협력안보나 지역주도권 강화는 한·중 FTA를 추진하는 중국의 정치·외교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국이 한·중 FTA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정치·외교적 의도와 경제적 의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경제적 의도

FTA가 관련국간 자유로운 무역,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목적에서 출발한다. 즉,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활용해 한·중 FTA를 추진함으로써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한·중 FTA 추진 의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의 제고, 수출증대,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및 선진기술 획득,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증대, 중국의 동북3성 지역 개발,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I

II

III

IV

V

VI

먼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의 제고이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높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제 관리 경험 면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고, 중국은 노동력과 원자재 그리고 시장구매력 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⁵⁴ 따라서 중국은 한·중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의 첨단기술이나 경영관리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치경제적 위험 부담이 큰 미국식의 자유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보다 한국식 발전모델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유사한 발전경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⁵⁵

둘째, 한·중 FTA는 중국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1,775억 달러와 2,622억 달러의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역마찰, 시장개방, 인민폐 평가절상 등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중국은 FTA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기존 무역흑자 대상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새로운 시장은 아니지만 무역적자 대상국인 바,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에 대한 농산물 및 일부 제조업의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무역적자 폭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자국기업의 한국 진출 촉진 및 선진기술의 습득을 의도하고 있다. 중국은 넘쳐나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해왔다. 그동안 중국은

54- 趙婷, “經濟互補性, 競爭性與中韓建立FTA的可行性,” 『環球經濟』, 第11期 (2007), p. 98.

55- 최원기, “중국의 한·중 FTA 추진배경과 한·중 FTA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12), pp. 6~7.

세계 각국에서 기술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인수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원자재나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처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나, 서비스시장 진출, 우량기업의 지분인수, 기업인수를 통한 고급기술과 경영노하우 습득 등의 측면에서는 중국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돼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TFT-LCD 부문을 인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FTA의 체결을 통해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촉진하거나 한국기업의 인수를 통한 선진기술을 습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중국은 한·중 FTA의 추진을 통해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양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유치실적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21세기 접어들면서 중국은 환경규제 강화, 임금인상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춘 환경친화적 산업, 하이테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즉 외자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던 세제혜택, 관세 환급 등 각종 우대조치를 폐지 혹은 축소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국내개발 즉, 동북3성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⁵⁶ 중국은 국내의 지역발전

⁵⁶ 중국은 동북지역의 노후한 공업기지를 진흥시키는 여러 방안 중에 지리, 문화, 경제발전 단계에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는 한국자본의 유치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張小濟 編, 『面向21世紀的中韓經貿合作』, pp. 152~183.

I
II
III
IV
V
VI

격차 해소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2000년 서부대개발계획과 2003년 동북진흥전략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서부지역개발은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동북3성 지역의 개발은 중앙재정도 투입되지만 성 정부의 자금조달과 해외 투자유치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계획은 정부보 증채권 발행, 기업 부실채권 정산, 정부차관 수준의 저리차관 확보, 지역발전 지원전문은행 설립,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합자은행 설립 등이다. 따라서 동북3성 지역의 개발에는 해외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 동북 3성 지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미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기업의 동북 3성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북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주변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면서 FTA를 적극 추진해왔다. 서남아(파키스탄), 동남아(아세안·홍콩)와는 이미 FTA를 체결했고, 중앙아(SCO)와 인도 등과도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바, 한·중 FTA는 중국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중 FTA는 중국이 이미 체결한 홍콩 및 아세안과 연결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주도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FTA의 허브로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 정치·외교적 의도

중국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치·외교적 의도는 중국의 대외전략과 그에 따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중관계의 발전,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동북아 역내 주도권 확보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중관계의 발전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간의 배타적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양국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통로이자 수단이 된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와 세계경제 편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해 온 중국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주목하였고, 한·중 양국간 경제적 상호보완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은 중국이 한국과의 국교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는데 주요 동인이 되었다.⁵⁷ 이로 인해 한·중관계는 선린우호관계(1992~1997년), 협력 동반자 관계(1997~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년~현재)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지만, 21세기 들어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정치안보적 교류협력의 필요성도 그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 부상에 필요한 평화로운 주변환경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평화적 부상에 대한

57- 張蘊嶺 主編, 『中國與周邊國家:构建新型伙伴關係』(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pp. 66~70.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위해서, 자국에 유리한 역내 질서 수립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한국과의 관계는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한국과의 관계 설정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 강화, 한·미·일 3국 공조 확대 등을 목도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위상과 영향력의 상대적인 약화를 경계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킨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한국과의 관계를 제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평화롭고 안정된 주변 환경의 모색 차원에서 한반도를 관리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조성을 중시해왔고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동아시아지역의 중요한 대외전략 목표 중의 하나로 삼아왔다. 2020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의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에 유리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는 핵심적인 외교과제가 된다. 한반도의 안정이 없이는 중국이 의도하는 조화로운 아시아 건설을 이룰 수 없으며, 동북아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전방위 외교 추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⁵⁸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정책(win-

⁵⁸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찬성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하였으나, PSI전면참여 유보 등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수준에서 실시하였고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유도하였다.

win, 雙贏)을 구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로 한·중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진다면, 중국의 동북지방을 거점으로 한 남북한 및 중국간 3국 협력을 중국이 주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중국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한·중 FTA의 체결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남·북·중 3국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한·중 FTA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주변국이며 동시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정책기조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지지’에다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가 점차 중시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⁵⁹ 또한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관계가 조정기를 거치는 동안, 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확대해왔다.

그러나 2006년부터 한·미 FTA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2007년 4월 2일 마침내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중국이 한·중 FTA의 추진을 서두르는 것도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였

⁵⁹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참조.

I
II
III
IV
V
VI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한·미 FTA에 대한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한·미 FTA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간주하고서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⁶⁰ 따라서 중국은 한·중 FTA를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한반도에서 강화된 발언권을 바탕으로 동북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NAFTA, EU와 달리 역내 활발한 경제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협력체나 통합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FTA를 주요 수단으로 삼아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의도하고 있다.⁶¹ 이는 중국이 지역협력 및 통합과정과 마찬가지로 양자간 FTA에서도 대국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⁶² 실제로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체결시 대국으로서 많은 부분을 양보한 바 있으며, 한·중 FTA 추진을 위해서도 민감한 농업분야에 대한 양보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일본과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세안과 FTA 체결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중국은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한·중·일

⁶⁰- 詹小洪, “韓美FTA談判意在抗衡中國,” 『鳳凰週刊』, (2006. 4. 3).

⁶¹- 龐中英, “中國的亞洲戰略·靈活的多邊主義,”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1), pp. 33~34.

⁶²- 중국은 1996년부터 10년간 아시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율이 40%이상에 달하며, 2005년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4,40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0% 성장하였고, 전체 수입액의 67%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투자도 80%가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었음을 강조한다. 國紀平, “好隣居, 好朋友, 好伙伴,” 『人民日報』, 2006年 12月 11日.

3국간 FTA 논의를 제의하였으나, 일본의 비협조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일 FTA 논의가 한·중, 중·일 FTA보다 앞서가자 중국은 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은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비회원국인 중국의 대한·일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확대,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 감소 등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긴밀해진 한·일관계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중국이 수동적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⁶³ 따라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한·중 FTA 추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 내지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영향평가

이상 중국의 의도를 통해 볼 때, 한·중 FTA는 우리에게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정치·외교적 차원에서의 영향을 동시에 줄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한·중 FTA는 한·중 양자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한·중 FTA와 중첩되어 있는 국내 및 동북아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중 FTA의 영향을 경제적, 정치·외교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이것과 중국의 추진의도를 고려해 종합, 평가하고자 한다.

가. 경제적 영향

기본적으로 한·중 FTA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

63- 田香蘭, “日韓FTA動向及對中國經濟的影響,” 『東北亞研究』, 第4期 (2005), pp. 33~34.

I
II
III
IV
V
VI

문에 일차적으로 한·중 경제관계 및 국내경제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한·중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1) 무역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중 양국은 각기 상대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각각 상대국 시장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획득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교역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양국 간 총교역의 증가는 한국의 대중 수출 증대와 함께 수입 증대 효과도 동시에 가져다줄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인 무역관계가 강한 부문은 FTA에 따른 무역증대 효과가 클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자본·기술집약적인 부문에서 중국은 농업·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바, 한·중 FTA는 이 부문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에 관한 기존연구를 보면, 수출은 최소 55억 달러에서 최대 300억 달러, 수입은 최소 57억 달러에서 최대 14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무역수지 효과는 다르게 분석되고 있다. <표 IV-1>에서 보듯이, 임운상은 5억 달러, 정인교는 240~250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전망한 반면, 남영숙은 2.7~76억 달러, 이홍식은 0.5~2.2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를 전망하였다.

<표 IV-1> 기존연구⁶⁴에서 나타난 한·중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 달러)

기존 연구	한국의 대중국 수출	한국의 대중국 수입	무역수지
임윤상(2002)	1,740	1,220	520
남영숙 외(2004)	5,488~6,543	5,757~14,192	-269~-7,649
이홍식 외(2005)	13,998~14,501	14,220~14,546	-45~-222
정인교(2006)	32,620~33,319	7,583~9,279	25,037~24,041

출처: 양평섭 외,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 35.

이러한 상이한 분석 결과는 연구시기와 방법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하지만, 한·중 무역구조의 특성과 한·중 FTA의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명목 관세율은 약 10%로 높은 편이지만, 가공무역용 원자재 및 일부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또는 환급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이와 같은 수출용 중간재의 비중이 2006년 기준 7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FTA에 수반되는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내구력이 있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기업은 관세장벽을 피해 이미 중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⁶⁴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신태용 외,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Hong Sik Lee, et. al. (eds.),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효과 추정,” pp. 111~138.



따라서 그동안 중국의 고관세로 인해 수출이 부진했던 소비재와 같은 품목,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과 같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협정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의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기술 표준, 검역, 통관절차 등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해 이들 비관세장벽이 효과적으로 제거 내지 완화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중 FTA가 단순한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상품무역 관련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 내지 완화될 수 있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유의미한 추가 증가도 기대된다.⁶⁵

반면, 한국은 비교열위에 있으나 중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농업, 수산업 및 의류·가구·피혁·전기전자·기타 수송 장비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사실, 이는 FTA 체결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만일 FTA로 무관세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중국 수입의 급증은 한·중 교역에서의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도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를,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52.9%), 농수산업 및 국내 취약산업의 기반 약화(35.3%), 대중국 경제의존도의 심화(9.2%)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⁶⁶ 특히, 쌀을 비롯한 농수산업은 한국의 민감 분야로서, 현재 한국은 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65-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3호 (2007. 12), p. 151.

66- 전경련, 『한·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서울: 전경련, 2006. 11), p. 4.

위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점은 한·중 FTA의 조기 협상개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 협정인 FTA에서 어느 일방의 요구만 수용할 수 없는 바, FTA 체결 시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중 FTA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국의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한·중 양국은 이미 교역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IV-2>와 <표 IV-3>에서 보듯이 한국의 수출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3%에서 2007년 22%로 상승했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5.5%에서 2007년 17.6%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4%에서 2007년 4.6%로, 중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7.8%에서 10.8%로 증가했다. 이로써 2007년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입 국가가 되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무역흑자가 전체 무역흑자인 약 146.4억 달러를 상회하는 약 189.6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도 증대하게 되었다.⁶⁷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간의 무역에 차별적인 특혜가 주어지는 한·중 FTA 체결이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67-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한국의 무역통계” <<http://www.kita.net>>.

<표 IV-2> 한국의 무역 중 중국의 비중

(단위: %, ()은 순위)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비중	7.3(4)	10.7(3)	21.8(1)	21.3(1)	22.0(1)
수입비중	5.5(3)	8.0(3)	14.8(2)	15.7(2)	17.6(1)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중국해관통계.

<표 IV-3> 중국의 무역 중 한국의 비중

(단위: %, ()은 순위)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비중	4.4(4)	4.5(4)	4.6(4)	4.6(4)	4.6(4)
수입비중	7.8(4)	10.3(3)	11.6(2)	11.3(2)	10.8(2)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중국해관통계.

한·중 FTA는 양국 기업에 생산비용 감소를 통해 제3국에 대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특히 양국이 부품이나 중간재에 대한 교역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제3국의 수출에 유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일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며, 이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본의 대외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4>에 의하면, 일본의 수출 감소효과가 수입 감소효과보다 커서 일본 무역액의 292억 달러를 감소시키

고 7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초래함으로써 0.07%의 GDP 감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IV-4> 한·중 FTA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GDP (%)	수출(%)	수입(%)	무역수지(억 달러)	무역액(억 달러)
-0.07	-4.71	-3.85	-77.29	-292.00

출처: 徐長文, “中國的FTA實施策略與東亞地區經濟整合,” 『中國21(愛知大學現代中國學會)』, Vol. 21 (2005), pp. 41~45; 于瀟, “東亞地區自由貿易發展中的日本與中國的FTA競爭,” 『日本研究』, 第4期 (2006. 4), p. 4.

(2) 투자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시장개방이 심화되고 경제통합이 진전된다면, 이는 상호간 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물론 이 효과의 크기는 FTA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협정 내용에 직접투자 관련 자유화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 크기는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V-5>에서 보듯이,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FDI)는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3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물론 2005년 이후 그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2007년 현재 36.8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표 IV-5> 한·중 투자규모 변화 추이

(단위: 건, 억 달러)

구분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중국의 대한 투자	투자건수	1,381	1,679	2,150	2,242	-	-
	신고건수	442	522	596	672	333	-
	신고금액	2.5	0.5	11.6	0.7	0.4	-
중국의 대한 FDI 유치액	계약건수	4,008	4,920	5,625	6,115	4,262	3,452
	계약액	52.8	91.8	139.1	197.6	-	-
	실행액	27.2 (26.4%)	44.9 (65%)	62.5 (39.8%)	51.7 (-17.3%)	38.9 (-24.6%)	36.8 (-5.9%)

주: 괄호는 증가율을 의미함.

출처: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www.kita.net>.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관세혜택, 시장 확대(한국재 수출), 고품질 원자재 확보,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⁶⁸ 다만, FTA와 무관한 중국의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반독점법 실시, 가공무역 금지, 수출환급세 인하 등 경영환경 악화를 감안하면, 제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기업의 해외이전 능력과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⁶⁹

한편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⁶⁸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pp. 130~133.

⁶⁹ 姜憲九, “中韓建立FTA의 可行性與經濟效應分析,” 『對外貿易』, 第2期 (2008), p. 46.

대중국 투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2007년까지 중국의 대 한국 투자 누계액이 21.7억 달러로서 한국의 전체 누계투자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표 IV-6>에서 보듯이, 한국은 2005년 현재 중국의 4대 투자대상국이며, 1위인 홍콩이 중국과 CEPA를 체결한 국가라는 점과 2,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국가들이 소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투자대상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절의 중국의 의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초로 외국의 기술, 자원, 브랜드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走出去)을 실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증대할 것이다.⁷⁰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는 한국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외에도 선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기에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⁷⁰ 중국정부의 <대외투자국별산업지도목록(2004)>을 보면, 한국의 자동차 및 교통 운수업, 화공·통신설비·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무역·R&D·유통 업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1호 (2008. 6), p. 64.

<표 IV-6>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주요 대상지역(2005년 현재 누계 기준)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및 지역	누계금액
1	홍콩	365.10
2	케이만군도	89.36
3	버진군도	19.84
4	한국	8.82
5	미국	8.23
6	마카오	5.99
7	호주	5.87
8	러시아	4.66
9	수단	3.52
10	버뮤다	3.37

출처: 商務部, 『2005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北京: 商務部, 2006).

(3) 거시경제 및 산업별 영향

한·중 FTA로 인한 무역 및 투자의 증대 효과는 한국의 GDP와 국내산업에도 긍/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표 IV-7>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GDP는 0.14%~3.29%, 중국의 GDP는 0.07%~1.32% 증대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실제로 전경련이 2006년 10~11월, 한·중 FTA에 관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 중 70.3%가 한·중 FTA 체결이 국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⁷¹

양국의 GDP 증대 효과는 연구에 따라 서로 상이하나, 공통된 분석

⁷¹ 구체적으로 대중 수출은 87.4%가, 소비자 후생은 67.7%가, 국내투자유치 확대는 55.4%의 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답했다. 전경련, 『한·중 FTA 기업 의견조사 결과』, p. 7.

결과는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경제의 규모가 중국에 비해 작고, 한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중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보다 높으며, 중국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⁷²

<표 IV-7> 기존 한·중 FTA 연구에 나타난 GDP 증대효과
(단위: %)

기존연구	한국	중국
남영숙 외(2004)	0.14~2.30	0.07~0.78
신태용 외(2005)	0.18~1.08	0.04~0.18
이홍식 외(2005)	2.44~3.17	0.40~0.59
정인교(2006)	0.55~3.29	0.27~1.32

출처: 양평섭 외,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p. 34.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개별 산업에 대한 영향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양국의 비교우위 산업이 다르기 때문인데, 중국은 농업, 수산업 및 의류·가구·피혁·전기전자·기타 수송 장비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화학공업, IT 등 첨단산업, 보험·증권 등 금융업, 서비스산업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⁷³

중국 측의 분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중국은 한·중 FTA 협상 시 농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의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⁷² 양평섭 외,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pp. 34~35.

⁷³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pp. 140~141.

것으로 진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중국의 비교우위를 인정하고 있다.⁷⁴ 반면, 중국의 금융, 보험, 증권 및 기초 IT서비스 등 부문을 중국의 민감 분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비교우위를 인정하고 있다.⁷⁵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대중국 수출이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중 FTA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국내시장의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대중국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는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농수산업의 피해는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양국간 FTA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또 어떤 농수산품을 자유화 예외로 하고, 유예기간을 얼마나 할지가 핵심 협상이슈이자 국내 논쟁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노동집약적 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 제품의 수입도 급증함으로써 이로 인한 상당한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 피해는 광범한 제조업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중국과의 경제교류 급증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⁷⁶

74- Zhang Jianping,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Seoul: KIEP, 2006), pp. 26~30.

75- 楊樹明, “中韓自由貿易區构建思路,” 『遼寧大學學報』, 第35卷 第4期 (2007. 7), p. 69.

76-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p. 152.

나. 정치·외교적 영향

한·중 FTA의 정치·외교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처럼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다. 그러나 FTA는 국가간 협정일 뿐만 아니라, 체결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로서 정치·외교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동반한다.⁷⁷ 그런 점에서, 한·중 FTA는 한·중 양자간 정치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한·중관계에 중첩되어 있는 국내정치와 동북아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정치

한·중 FTA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한·중 FTA의 추진의도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치적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한·중 FTA는 양국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교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국내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확대는 더 많은 분야에서 이해충돌로 이어져 국내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중 FTA는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를 높이고, 이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증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발 충격에 대한 취약성 증대 및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의 심화라는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⁷⁷- FTA를 수단으로 외교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역내 평화체제를 공고히 한 사례로는 EU와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을 들 수 있다.

대한 정치적 해석과 논란은 국내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우리의 대중국 의존도 증대 가능성이 대한 우려는 국내의 반중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경제실리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는데, 이 과정에서의 긴밀한 교류와 접촉의 증대는 우리의 대중국 이해와 신뢰형성에 기여하였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역사왜곡으로 불거진 동북공정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최근의 올림픽 성화 봉송 및 멜라민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내 일각에 반중 정서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반중 정서가 한·중 FTA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논리적 비약과 결합될 경우 국내정치적 논란과 국내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한·미 FTA 추진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갈등과 소고기 협상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한·중 FTA가 한·미 FTA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할 지는 미지수이며, 중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가 아직은 한·미관계처럼 스펙트럼이 다채롭고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중 FTA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갈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목도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종속을 우려하는 ‘동북4성론’이 제기된 예에서 보듯이, 한·중 FTA로 인한 한·중 경제통합의 가속화와 우리의 대중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동북공정 문제와 연계되어 ‘중국위협론’의 근거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⁷⁸ 이것이 한·중 FTA 추진 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는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결합된다면, 한·중 FTA의 협상과정에서부

⁷⁸ 이와 관련한 자세한 분석은 이희옥,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의 함의: 동북4성론 논란을 포함하여,” 『현대중국연구』, 제8집 1호 (2006. 8), pp. 75~107.

터 국내정치적 갈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취약산업의 도산과 대중국 투자 증대로 인한 산업 공동화로 야기될 수 있는 실업문제도 한·중 FTA 협상과정이나 체결 이후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한·중관계

한·중 FTA는 무엇보다도 한·중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는 경제성장의 효과와 함께 양국의 산업간 또는 산업 내 분업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친밀도가 더욱 높아지고 상호신뢰가 증진됨에 따라 양국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FTA는 양국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경제교류의 증가가 사회문화 및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발전해 온 지금까지의 한·중관계를 고려한다면, 한·중 경제관계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중 FTA는 한·중 사회문화 및 정치·외교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08년 5월 양국정상이 선언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⁷⁹ 한·중 FTA는 경제적 관계의 긴밀화와 유대강화에 따른 양국간 공동체 의식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치·외교

⁷⁹ 양국정상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선언했다고 해서 양국관계가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에 상응하는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베이징 올림픽 폐막 직후인 8월 25일 한국을 방문한 후진타오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 이 회담에서는 전략대화의 상설화, 2010년 내 2,000억 달러의 교역 달성, 정치, 경제, 문화, 지역 및 국제협력 관련 총 34개에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최춘흠, “한·중 서울 정상회담(8.25) 평가,”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08-23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8. 8. 27).

적 이슈에서의 협력관계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 FTA로 인한 높은 상호의존도는 한·중 양국이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과 사안별 공조를 넘어서서 사회문화 및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과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FTA를 통한 경제교류협력의 강화는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시켜 한·중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보다 높은 불균형적인 한·중관계가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한·중관계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러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하도록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의 구축을 통해 주변국의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는데 활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중관계가 한·미동맹 관계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협력의 안보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ies)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며, 단기적으로 안보동맹을 강화시킨다든지, 안보이슈의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의 FTA 추진과정에서 볼 때, 한·미 FTA가 한·중 FTA보다 먼저 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히려 한·중 FTA로 파생되는 부정적 측면, 즉 국내 취약산업의 도산과 실업문제, 높은 상호의존으로 인한 마찰 증가, 이로 인한 중국

의 협한 정서 및 국내의 반중 정서 등이 한·중관계의 발전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한·중 경제관계만이 아닌 정치·외교적 관계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촉진시키는 영향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며, 특히 정치적 통합이나 안보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다만, 상생할 수 있는 미래 한·중관계의 설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중 FTA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하면서 지속적인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

(3) 동북아협력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가 동북아지역 협력이나 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한·중 FTA가 양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것이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⁸⁰ 따라서 한·중 FTA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협상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중 FTA는 협상을 개시하는 과정에서부터 한·일 FTA 또는 한·중·일 FTA의 논의와 협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한·일 FTA에 대한 대응 및 역내 주도권을

⁸⁰ 劉昌黎, 『東亞雙邊自由貿易研究』, p. 231.

둘러싼 일본과의 경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내 FTA 체결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한·일 FTA 체결이전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도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조기에 성사시켜 한국을 동북아 FTA의 허브로 삼고자 하는 한국의 FTA 전략과 맞물리면서 동북아의 주요 3국인 한·중·일 상호간 또는 공동의 FTA 협상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중 FTA는 중장기적으로 FTA의 설립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FTA는 중국과 일본의 역내 주도권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국가간 협력만이 아니라, IT, 환경 등 분야별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⁸¹ 따라서 한·중 FTA는 단기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동북아지역의 FTA논의와 협상을 촉진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로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이 사회문화, 정치·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능주의 시각에서 보면, 한·중 FTA는 여타 분야의 역내 협력이 기대된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대부분 정부차원의 협력이 아닌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는데 일정 부분만 기여할 뿐, 정치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파급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

⁸¹ 盧海濤, 陳爲國, “构建中韓自由貿易區, 促進東亞經濟一体化,” 『經濟研究導刊』, 第9期 (2007), p. 178.

다.⁸² 그러나 한·중 FTA가 체결되고 이것이 한·일, 중·일 FTA 등 역내 복합적 FTA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면, 역내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역내 사회문화 및 정치·외교 등의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가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을 촉진시킬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일간의 역내 주도권 경쟁 및 갈등은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간의 상이한 역사인식과 영토분쟁, 민족주의 문제 등은 역내 주도권 갈등과 함께 동북아지역의 경제/안보협력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다. 한·중 FTA는 이러한 외교안보적 갈등요인들을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완전한 해소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욱이 자국이 배제된 역내 협력에 미온적인 미국의 존재와 한·미 FTA의 체결은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에 대한 한·중 FTA의 영향력을 제한할 것이다.⁸³

다. 종합평가

한·중 FTA의 정치·경제적 영향은 한·중 FTA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 협정 내용과 한·미, 한·EU, 한·일 등 여타의 FTA의 체결 순서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평가가 이루

⁸² 박종철 외,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pp. 519~522.

⁸³ 2005년 미국 의회연구서비스센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한국, 대만과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Dick K. Nanto and Emma Chanlett-Avery, "The Rise of China and Its Effect on Taiwan, Japan, South Korea: U.S. Policy Choic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April 12, 2005), p. 32.

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 채 현 단계에서 분석 가능한 한·중 FTA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은 정치적 영향에 비해 직접적이다. 단기적으로 한·중 FTA는 한·중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고 산업간 분업을 증대시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과제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⁸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의 경제교류협력의 증대는 점차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규모 및 향후 성장추세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중국의 대한국 경제의존도를 능가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는 경제교류협력 중심의 한·중관계를 사회문화 및 정치·외교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여타의 FTA가 없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중 안보관계 형성 및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으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한·중 FTA의 정치경제적 영향은 중국이 한·중 FTA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의도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의 제고, 수출증대,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및 선진기술 획득,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증대, 동북지역 개발, 동북아 경제적 영향력 확대 등과 정치적 의도인 한·중관계의 발전,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⁸⁴ 王磊, “中韓貿易合作的效應, 障礙及政策分析,” 『廣東財經職業學院學報』, 第6卷第6期 (2007. 6), p. 8.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동북아 역내 주도권 확보 등에 의해 우리에게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의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특히 한·중 무역 및 투자의 증대로 인한 양국경제의 긴밀화와 그것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반드시 한·중 FTA의 효과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 IV-8>에서 보듯이, 한·중 무역은 이미 FTA의 틀 없이도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점차 증대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역적자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중 FTA를 추진하는데 순수 경제적 동기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한·중 교역규모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중 통 국 계	무역규모	440.9	632.7	899.8	1119.9	1343.8	1601.7
	대한국 수출	155.1	201.2	278.1	351.2	445.6	561.3
	대한국 수입	285.8	431.6	621.7	768.7	898.2	1040.5
	무역수지	-130.7	-230.6	-343.6	-417.6	-352.6	-479.2
한 통 국 계	무역규모	411.5	570.2	793.5	1005.6	1180.2	1450.1
	대중국 수출	237.5	351.1	497.6	619.2	694.6	819.9
	대중국 수입	173.9	219.1	295.8	386.5	485.6	630.3
	무역수지	63.5	132.1	201.8	232.7	209.0	189.6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www.kita.net>.

I
II
III
IV
V
VI

V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대응방향



1. 한·중 FTA와 남·북·중 관계의 함수

한·중 FTA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찾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북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FTA는 배타성을 갖는 체결 당사국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제3국인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민족문제와 국제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중 FTA는 남·북·중 3자의 3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한·중 FTA로 인해 변화된 한·중관계는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에 연동된 변화를 미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중 FTA가 북·중관계 및 남북관계와 어떠한 함수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 한·중 FTA와 북·중관계

앞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중 FTA는 한·중 무역 및 투자의 증가로 상호 무역의존도를 증대시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북한 및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다음에서는 이를 정치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정치·안보 관계

탈냉전 이후 북·중관계는 이념의 공유를 기초로 한 특수관계가 해체되고 국제환경 및 국가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 또는 갈등하는 일반 국가간의 관계로 전이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공식적으로 전통 우호협력 관계의 틀을 유지한

I

II

III

IV

V

VI

채 실제 정책운용에 있어서는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다고 평가된다.⁸⁵

이러한 전략적 협력관계는 북·중 양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북한체제의 유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적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위해서도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유지 및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로 한·중간의 경제협력 수준이 제고되고 전략적 협력관계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북한과 중국간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되거나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FTA 자체가 경제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협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앞서서도 분석했듯이, 한·중 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 대외전략적 의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한반도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이 한반도정책의 기조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 하에 수립된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인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체제의 유지·지원, 대북 영향력 강화 등도 유지될 것이다.⁸⁶

⁸⁵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 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pp. 201~202.

⁸⁶ 전병곤, “김정일 정권 향방에 따른 중국의 선택,”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08-3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8. 9. 18).

북한 역시 외교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안전판으로서 중국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한·중 FTA의 체결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한·중 FTA의 안보외부효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북·중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북핵문제나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중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협력과 일정 수준의 의존이 불가피하지만, 한·중관계 발전에 상응하는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핵문제의 진전 여하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일본, 서방권과의 관계개선이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한·중 FTA의 영향으로 한반도정책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고 비중도 높여갈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과 갈등 또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체제의 붕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북한의 급변사태나 한반도 통일문제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 군사적 개입보다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중관계는 양자관계의 전통 속에서만 움직이기보다 동북아 정세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 북·중관계는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관계의 이해, 특히 중·미관계의 협력과 갈등 국면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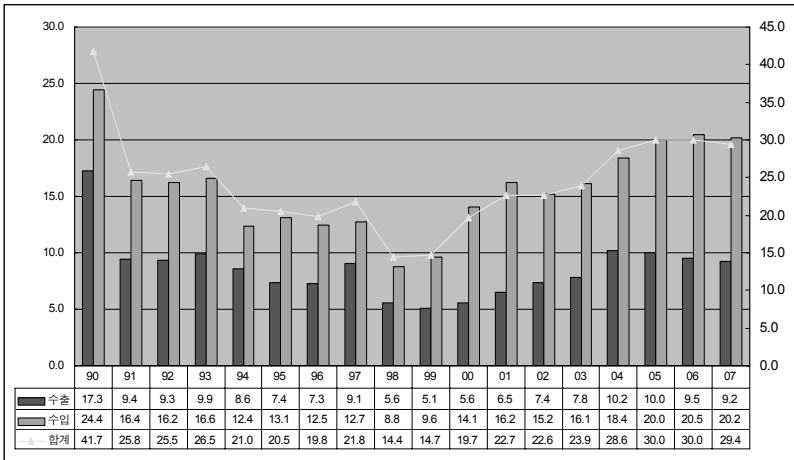
I
II
III
IV
V
VI

(2) 경제관계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식량부족현상을 비롯하여 에너지난과 낮은 산업가동률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발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대외무역도 2007년에 무역총액이 전년대비 1.8% 감소한 29억 4,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년 연속 감소하였다.(2006년은 0.2% 감소). 수출은 9억 1,900만 달러로 3.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0억 2,200만 달러로 1.3% 감소하였다. (<그림 V-1 참조>)

<그림 V-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출처: KOTRA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V-1>를 보면, 2003년 양국의 무역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미사일과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더욱이 2007년 전년대비 16.2% 증가하

였다.⁸⁷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무역 증가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증대시켰다. <표 V-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1년과 2002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에 머물렀으나, 2003년에는 32.8%, 2004년에는 39%로 크게 증대하였고 이러한 비중은 2006년까지 유지되었다. 2007년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북한 대외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는 67%(2006년도 56.7%)에 달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북핵위기 이후의 미국 및 일본의 경제봉쇄에서 기인한다.⁸⁸

<표 V-1>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무역	6.9	9.0	6.2	5.4	5.6	6.5	4.1	3.7	4.88	7.37	7.38	10.2	13.85	15.80	16.99	19.7
수 출	1.5	2.9	1.9	0.6	0.6	1.2	0.57	0.42	0.37	1.67	2.71	3.95	5.86	4.99	4.68	5.8
수 입	5.4	6.0	4.2	4.8	4.9	5.3	3.56	3.29	4.51	5.71	4.67	6.28	8.00	10.81	12.31	13.9

출처: KOTRA, “연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http://www.kotra.or.kr>>.

I
II
III
IV
V
VI

⁸⁷- 통일부, “07년 북·중 무역규모 전년비 16.2% 증가”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08. 7. 18).

⁸⁸- 陳龍山, “朝鮮對中國的經濟依存度分析,” 『東北亞論壇』, 第17卷 第3期 (2008. 3), pp. 8~12.

<표 V-2> 북한의 주요 국가별 무역액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무역액	비중
중국	737.5	27.6%	738.2	25.4%	1,022.9	32.8%	1,385.2	39.0%	1,580	38%	1,699	39%
한국	4.3	15.1%	641	22.1%	724	23.2%	697	19.6%	1,056	26%	1,350	31%
일본	474.7	17.8%	369.5	12.7%	265.3	8.5%	252.6	7.1%	193.6	4%	121.5	2%
러시아	68.3	2.6%	80.7	2.8%	118.4	3.8%	213.4	6.0%	232	5%	210	4%
태국	130.1	4.9%	216.6	7.5%	254.3	8.2%	329.9	9.3%	329	8%	374	8%
인도	157.8	5.9%	191.3	6.6%	158.4	5.1%	135	3.8%	36.2	0.8%	116.5	2%
기타	702.1	25.0%	664.1	23.0%	572.0	18.0%	541.0	15.0%	629	18%	474	14%
총계	2,673.5	100.0%	2,901.4	100.0%	3,115.3	100.0%	3,554.1	100.0%	4,056	100%	4,346	100%

출처: KOTRA, “연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재작성.

이처럼 북한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중 FTA는 한·중 교역 및 투자를 증대시켜 북·중 무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중 FTA로 인한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및 투자의 증대가 북·중 교역 및 투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수출입 품목과 북·중 수출입 품목의 비교를 통해 한·중 수출입 증대가 북·중 수출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표 V-3>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표 V-4>에서와 같이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해산물, 의류 등이며, 2007년의 경우에도 광물, 의류, 철강, 해산물 등의 순으로 유사하다. 이는 한국과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전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

<표 V-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의 변화 추이

순위	1995년	2000년	2005년
1	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2	식물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3	철강제품	광물성 연료	석유화학제품
4	가죽 모피제품	식물	기초산업기계
5	산업기계	철강제품	철강제품
6	광물성연료	산업용전자제품	수송기계
7	섬유원료	가죽 모피제품	광물성연료
8	가정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9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식물
10	제지원료 종이	산업기계	비철금속제품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www.kita.net>>.

<표 V-4>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연도 품목	2004년		2005년		200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오징어, 조개 등	128,148	무연탄	108,273	무연탄	96,651
2	계류	74,135	철광석	66,521	철광석	76,594
3	갈치, 명태 등	57,252	오징어, 조개 등	51,140	오징어, 조개 등	38,177
4	무연탄	49,085	철 스크랩	34,890	여성의류	19,214
5	철광석	44,521	갈치, 명태 등	23,270	남성의류	19,114

주: HS Code 4단위 기준.

출처: <<http://www.kita.net>>.

<표 V-5>과 <표 V-6>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 철강, 섬유, 농산물, 화학제품 등이나,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에너지(원유) 외에 돼지고기와 직물류 등이다. 2007년의 경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 기계류, 전기기기, 플라스틱류, 자동차 등의 순으로 총 13.9억 달러를 수입했다. 한국과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일부 섬유류를 제외하고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및 북한으로의 수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중 FTA로 인한 대한민국 수출증대가 대북한 수출 품목을 전환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즉, 한·중 FTA는 북·중 무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5>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입상품의 변화 추이

순위	1995년	2000년	2005년
1	철강제품	전자부품	산업용전자부품
2	직물	농산물	철강제품
3	광물성연료	광물성 연료	전자부품
4	농산물	산업용전자제품	섬유제품
5	섬유제품	섬유제품	광물성연료
6	정밀화학제품	철강제품	농산물
7	섬유사	직물	비철금속제품
8	가정용전자제품	중전기	가정용전자제품
9	비철금속제품	정밀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10	신변잡화	가정용전자제품	중전기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www.kita.net>>.

<표 V-6>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연도 품목	2004년		2005년		200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원유	139,326	원유	197,675	원유	246,897
2	돼지고기	134,984	돼지고기	95,565	돼지고기	108,628
3	석유·역청유 (조제품 포함)	48,853	석유·역청유 (조제품 포함)	73,600	석유·역청유 (조제품 포함)	78,241
4	컬러TV	22,597	옥수수	36,104	필라멘트램프, 방전램프	36,840
5	철,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21,860	합섬장섬유사의 직물	26,183	합섬장섬유사의 직물	36,095

주: HS Code 4단위 기준.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www.kita.net>>.

다음으로 한·중 FTA가 북·중 투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우선 북·중 투자관계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으로 북한의 대중 투자보다 중국의 대북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이는 북·중간 경제협력의 긴밀화 추세를 반영하는데, <표 V-7> 2000년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북핵 위기가 발발한 2002년 이후 2003년부터 중국의 대북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의 경우 전체 외자유치액인 1억 3천만 달러 중 중국의 투자는 1억 864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 중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중국의 대북 투자는 한·중 FTA로 인한 중국의 대한민국 투자증대 효과로 감소될 것인가? 이는 중국의 대북 투자와 대한민국 투자의 동기, 유형, 업종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대부분 장기저리의 차관형태인 유상지원으로 주로 원유와 식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SOC 개발, 지하자원 개발, 시장건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면에 중



국의 대한국 투자는 지원과 같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진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습득을 위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표 V-7>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2000년 이후)

(단위: 만 달러)

연 도	투자유치액	국가별 투자금액
2000년	907만 달러	중국 100 / 홍콩 450, 대만 350 / 미국 7
2001년	5,733만 달러	중국 306 / 네덜란드 2,000 홍콩 1,027 / 싱가포르 2,400
2002년	4,479만 달러	중국 70 / 일본 3,320 홍콩 309 / 이탈리아 780
2003년	450만 달러	중국 100 / 대만 350
2004년	5,865만 달러	중국 5,000 / 일본 641 영국 117 / 스위스 107
2005년	11,598만 달러	중국 11,348 / 일본 100 호주 140 / 홍콩 10
2006년	12,119만 달러	중국 12,110 / 일본 5 호주 4
2007년	13,210만 달러	중국 10,864 / 홍콩 1,730 이탈리아 300 / 이집트 150 싱가포르 110 / 마카오 56

이상에서 보듯이, 한·중 FTA로 인한 한·중 무역 및 투자의 증대는 기존 북·중 무역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한·중 FTA는 중국경제, 특히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한 산동성, 발해만 일대 및 동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협력이 활발한 북한경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동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따른 원부자재의 수요 증가 및 한국과의 무역 증대 등이 석탄, 철광 및 경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북·중무역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을 경유한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성 이외의 지역의 경우 중국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안정성에 유리할 수 있고, 한·중 FTA 체결이후 한·중간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을 경유한 대북투자 비용도 줄어들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한·중 FTA로 인해 한국에 수출하려는 제3국기업과 한국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늘어날 경우 북한의 외자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 한·중 FTA와 남북관계

한·중 FTA와 남북관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FTA의 무역전환효과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FTA의 상호의존효과 및 안보외부효과가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I

II

III

IV

V

VI

(1) 정치·안보 관계

한·중 FTA는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지만, 사실상 경제협력에 기초하여 양국관계를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거나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중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증대된 양국의 상호의존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긍정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에서의 발언권 및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외교안보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바,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로 인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중국이 한반도의 긴장고조나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의 발생을 적극 반대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서해교전 등과 같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반대할 것이며, 이점에서 한·중 양국은 대북정책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 문제에서도 중국은 중립적이거나 한국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의 안보외부효과를 고려하면, 한·중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리의 협력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의 변화, 한반도통일 등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만, 북한체제의 붕괴방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같은 외교안보 영역에서 우리

가 원하는 대로 중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중 FTA로 양국이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할 경우, 한·중 양국의 불균등한 힘에 의해 우리의 주도력이 제한되고 주요 외교안보 이슈에서 중국이 주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중간 형성된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는 양국간 빈번한 마찰과 갈등을 유발해 한·중 협력이 긴밀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시도를 미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대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한·미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남북한과의 협력을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동북지방에서의 한·중 경협은 활성화될지라도 북·중 경협과의 연계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및 중국의 3국 협력은 중국의 의도대로 주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역으로 한정된 남북경협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한·중 FTA의 안보외부효과를 고려하면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한·중 FTA는 한·중간 경제적 긴밀화를 강화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한·중 수교 이후 정치·외교적 타격을 받은 북한에 또 다시 경제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견제하는 한편, 지역통합 및 안보관련 이슈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을 제약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중 FTA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강화

I
II
III
IV
V
VI

될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불안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에 부정적 환경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중 FTA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나, 제한적이거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2) 남북경협

한·중 FTA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로 인한 제3국, 즉 북한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표 V-8>에서 보듯이, 남북 교역액은 2007년 현재 18.0억 달러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교역 중 반출과 반입은 2007년 각각 10.3억 달러와 7.7억 달러로 반출이 반입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표 V-8>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반입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반출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계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www.kita.net>>.

그러나 남북교역은 일반교역·위탁가공 이외에 경제협력과 비상업적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특히 반출의 경

우 경제협력(5.2억 달러)과 비상업적 거래(3.7억 달러)가 일반교역·위탁가공(1.5억 달러)에 비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로 인해 증대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대북한 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제한한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 증대가 대북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입의 경우 일반교역·위탁가공(6.5억 달러)이 경제협력(1.2억 달러)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중 FTA로 인해 증대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대북한 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려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증대가 대북한 수입을 대체하는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증대가 대북한 투자를 대체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중 교역품목과 남북교역 품목을 비교하면, 2007년의 경우 한국의 대북한 반입 품목은 섬유류, 농수산물, 철광석, 광산물 순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품목과 대체로 경합관계에 있다(<표 V-9> 참조). 따라서 한·중 FTA는 한국의 대북한 수입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및 대북한 투자업종이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감안하면,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의 대북한 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I
II
III
IV
V
VI

<표 V-9> 2007년 중 주요 반출입품목 교역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품목	반출			반입		
	금액	증가율	구성비	금액	증가율	구성비
농림수산물	137,382	35.8	13.3	184,189	33.6	24.1
광산물	79,443	115.5	7.7	120,796	102.2	15.8
화학공업제품	203,000	9.8	19.7	4,589	145.7	0.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1,800	120.6	2.1	4,764	25.3	0.6
섬유류	214,149	104.4	20.7	190,541	31.6	24.8
생활용품	32,688	68.1	3.2	18,912	21.9	2.5
철강금속제품	97,123	1.3	9.4	165,938	50.7	21.7
기계류	136,290	33.1	13.2	35,887	58.1	4.7
전자전기제품	103,012	80.3	10.0	38,335	74.3	5.0
잡제품	7,662	51.4	0.7	1,395	24.8	0.2
합계	1,032,550	24.3	100.0	765,346	47.3	100.0

주: 품목은 MPI 1단위 기준, 증가율은 전년비.

그러나 최근 중국 역시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노동자의 권익 강화, 세제개편, 수출환급세 폐지 혹은 인하, 인민폐 평가절상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빠르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중 FTA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중 FTA가 한국의 대북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점차 대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북한 투자에 부정적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반면 한·중 FTA가 남북경협에 주는 긍정적 영향은 적지 않다. 우

선, 한·중 FTA로 인한 한·중관계 개선 및 그에 따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은 남북경협을 안정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 한반도의 정치·안보적 불안요소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이러한 위험요소가 완화된다는 것이 남북경협에 주는 가장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중 FTA로 인한 한·중 경협을 활성화는 남북한 및 중국을 연결하는 물류·교통체계를 연결, 가동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중간의 막대한 물류량을 감안할 때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중국 동북지역과 연결하여 물류를 운반하는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남북한 및 중국간의 3자 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중 FTA로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경우 북한기업을 참여시키는 지역개발사업, 대북 인프라 개발, 에너지협력, 대북 산업투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⁸⁹

넷째, 이런 점에서 한·중 FTA는 남·북·중 3자 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양보 내지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의 중국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북3성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증대하는 등 한·중 경협을 활성화는 기존 북·중 경협과 연계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도시에 쌍방 공동으로 자유무역구를 설치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북한을 겨냥해서는 단둥(丹東)과 훈춘(琿春)을 집중 육성하고

⁸⁹ 홍익표, “한·중 FTA가 북한 및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자료, 2008. 9. 12), pp. 10~11.

I
II
III
IV
V
VI

있기 때문이다.⁹⁰ 단둥은 신의주 특구를, 훈춘은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한·중 FTA는 이 지역에 대한 한·중 공동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 점에서 한·중 FTA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의 경제와 북·중 경협 활성화의 이끄는 공구적으로 남·북·중 3자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 FTA는 한·일 FTA 등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은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이처럼, 한·중 FTA는 남북한과 중국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⁹¹ 이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발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대북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2. 남북관계를 고려한 대응방향

기존의 한·중 FTA의 추진방향은 경제통상전략 차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내실 있는 정책제언을 해왔으나, 한·중 FTA의 외교안보적 측면, 특히 남북관계를 고려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고려한 우리의 한·중 FTA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전략을 부정한다기 보다는 보완차원에서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⁹⁰- 趙傳君 主編, 『東北經濟振興與東北亞經貿合作』(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p. 298~335.

⁹¹- Jae Cheol Kim,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XLVI, No. 6 (November/December, 2006), pp. 908~911.

가. 고려사항

지금까지 분석했듯이, 한·중 FTA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나, 우리의 대외 주도력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FTA가 남북관계에 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익 증진의 기회요인으로 최대한 활용하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익 증진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 FTA는 대중국 수입이 대북한 수입을 대체하고 대중국 투자증대가 대북 투자를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남북한 교역 및 경험의 비중이 한·중의 그것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대비도 필요하다. 반면에 한·중 FTA는 남북 물류 및 교통체계 연결의 기회가 되며, 남·북·중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를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이익을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FTA는 한·중간의 협력 및 상호의존을 증대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즉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안정적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더 나아가 향후 통일과정에서 우리와 중국의 상호협력 기회를 높이고 대북정책에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될 경우 중국의 주도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

I

II

III

IV

V

VI

어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안보외부효과는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협력에서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전통적 한·미관계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한·중 FTA의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연계·균형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이익집단의 분열 및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것이 대북지원 및 경협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향후 대응방향

(1) 포괄적 추진

첫째, 포괄적 대외전략 수단으로서의 FTA 추진이다. 지금까지 한·중 FTA는 경제통상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의 상대적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인하,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등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초점을 두는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경우, 단기적 무역이익과 함께 FTA의 협상 및 국내 의견조정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라는 상징적인 정치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 무역이익은 FTA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어려우며 오히려 안보외부효과를 노리는 중국의 의도에 의해 정치·외교적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다. 게다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나 남북경협을 진전에 별다른 효과도 없다. 즉, 우리의 안보외부효과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 이익보다 중장기적 이익 그리고 외교안보 이익까지 고려했을 때, 한·중 FTA는 포괄적 대외전략 수단으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분석했듯이, 중국은 경제적 동기 이외에 외교안보적 동기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 FTA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영역을 넘어 외교안보적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중간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한·중 FTA의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양국의 분업구조 및 우리의 비교우위 산업을 염두에 둔 높은 수준의 FTA 추구가 바람직하다.

중국의 한·중 FTA 추진동기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안보외부효과를 위해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도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안보외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중 FTA는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외교안보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중 FTA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보외부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균형접근

둘째, 한·중 FTA 추진시 연계 및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중 FTA는 한·중관계를 넘어 북·중관계 및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중 FTA는 우리의 경제이익과 외교안보 이익을 상호 연계시켜 추진하되, 균형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한·중 FTA 관련

I

II

III

IV

V

VI

경제와 외교안보 이익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사안으로는 대표적으로 한·미 FTA 및 한·일 FTA의 추진을 들 수 있다

한·중 FTA의 체결을 기존의 한·미 FTA와 논의 중인 한·일 FTA와 전략적으로 연계해 동북아 FTA의 허브로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협력관계를 고려해 한·중 FTA를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 중심의 주도권을 확보 내지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활용하여 어느 일방으로 경사되지 않은 채 우리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제어할 수 있는 균형추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역내 영향력 및 패권을 위해 미국 및 일본과 경쟁 및 협력을 반복해왔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우리의 공간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한·미 FTA의 체결이 가시화된 이후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해야 우리의 협상력과 안보외부효과도 높일 수 있다. 만일 한·미 FTA가 재협상 등 체결이 지연될 경우 한·중 FTA도 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미·일 관계만을 중시해 접근한다면, 한·중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FTA도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협상시점은 한·일 FTA의 진전과 연계시켜야 하나, 한·일 FTA와 한·중 FTA의 상호 촉진과 각각의 불리한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선순환유도

셋째, 한·중 FTA와 남북협력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중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중 FTA로 증대된 한·중 협력관계의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중협력과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 및 중국의 3자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개발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개발, 산업협력 및 에너지 협력 등에 남북한 및 중국 3자간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한 및 중국의 3자 협력 모델에 대해 북한의 거부감이 덜 하며, 남북협력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중 FTA가 남북협력 및 동북아협력과 상호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즉, 한·중협력이 남·북·중 협력을 촉진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동북아협력에 기여하거나, 한·중 FTA가 한·중협력은 물론 한·일 FTA 및 동북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촉진시켜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중요한 핵심변수인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한·중 FTA의 안보외부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핵 불능화 및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비핵화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하여 긴밀한 한·중협력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중 FTA로 인해 강화된 한·중관계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라, 한·중관계가 한·미동맹을 자극하고 이렇게 자극된 한·미동맹의 진전이 한·중협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중관계와 한·일관계 역시 마

I
II
III
IV
V
VI

찬가지이다. 한·중 FTA 추진시 이러한 원칙이 수용되고 지켜질 때 한·중 FTA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원산지 규정의 확대

넷째, 한·중 FTA가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한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국 수입을 개성산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바, 한·중 FTA 협상에서도 당연히 역외가공 특례조항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한·중 FTA가 남북경협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일정 수준 제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열악한 투자여건을 한국의 인프라와 결합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중 FTA 이후 한국기업의 주요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환발해만 경제개발구에 대응하는 한편, 경쟁력을 잃고 도산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중 FTA의 역외가공 특례조항에는 개성공단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장기적으로 북한 내 여타의 경제특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남북협력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향후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우리기업의 북한 내에서 생산한 북한산 제품 전체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국내적 영향 최소화

다섯째, 한·중 FTA의 국내 정치경제적 영향의 최소화이다.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미 FTA를 능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적 대비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보다 열위에 있는 산업을 중국 또는 북한으로 이전하는 한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농수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정치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차원적인 FTA로 국내의 모든 산업이 비교열위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운용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이익집단의 분열을 거울삼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의 발전을 상호 모순으로 인식하거나, 이러한 인식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과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

결론 및 과제



이상에서 중국의 한·중 FTA 추진 전략 및 의도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한·중 FTA가 한·중관계에 주는 영향과 함께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북아협력에 주는 함의와 영향을 평가한 결과, 중국은 대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장의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사례를 통해 볼 때,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부국들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 및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주도권 확립 등의 주요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는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한·중 양자간 무역확대를 위한 경제협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관련한 대외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4장에서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는 한편,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에서 자국 영향력의 유지 및 확대를 시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발언권을 바탕으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통해 볼 때, 한·중 FTA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심화시켜 한·중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 FTA는 동북아지역의 FTA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협력에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I

II

III

IV

V

VI

5장에서는 한·중 FTA가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의 3자 3변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한·중 FTA는 경제적/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중 FTA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북한의 개혁개방 등 변화 촉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나, 중국의 영향력 증대로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이익과 외교안보 이익을 모두 포함해 향후 한·중 FTA는 포괄적 추진, 연계균형접근, 선순환유도, 원산지 규정 확대, 국내영향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중 FTA에 관한 중국의 적극성을 활용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를 우리의 국가전략과 한반도의 국운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행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의 강화를 통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이다. 한·중 FTA는 한·중관계의 발전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국내 및 한반도 주변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한·미간의 의견교환 및 정책조율을 강화하여, 한·중 FTA로 인한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한 한·중 FTA로 인한 한·중관계의 발전을 북한 핵의 폐기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는데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한 및 주변 4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한·중 FTA는 남·북·중 3자 협력에 기회가 되겠지만 이와 별도로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남북경제협약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에너지·경제지원과 같은 상응조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인 바, 에너지·경제지원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 및 이행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협력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의 변화 또는 정상국가화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VI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이수 외. 『신국제통상론』. 서울: 박영사, 2007.
- 김한성·여지나. 『중국·뉴질랜드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박종철 외.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신태용 외.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서울: 산업연구원, 2005.
- 양평섭 외.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유관영 외.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서울: 산업연구원, 2004.
- 이장규 외.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이흥식 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전경련. 『한·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서울: 전경련, 2006. 11.
- 정인교 외.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서울: 대외경제

- 정책연구원, 2003.
-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 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 劉昌黎. 『東亞雙邊自由貿易研究』. 大連: 東北財經大學出版社, 2007.
- 商務部. 『2005年 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北京: 商務部, 2006.
- 孫曉郁 主編. 『中日韓可能建立的自由貿易區』. 北京: 商務印書館, 2006.
- 楊洁勉. 『國際體系轉型和多邊組織發展』. 北京: 時事出版社, 2007.
- 李敏倫. 『中國新安全觀與上海合作組織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7.
- 張小濟 編. 『面向21世紀的中韓經貿合作』.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2006.
- 張蘊岭 主編. 『中國與周邊國家: 构建新型伙伴關係』.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 趙傳君 主編. 『東北經濟振興與東北亞經貿合作』.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朱成虎. 『十字路口: 中亞走向何方』. 北京: 時事出版社, 2007.
- 秦熠群. 『中日韓自由貿易區對中國貿易和產業影響的實證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6.
- 彭澎. 『和平崛起論』.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5.
-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6.
- 『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 北京: 人民出版社, 2002.
- Barry, Donald and Keith, Ronald. *Multilateralism and the Politics of Global Trade*. Vancouver, BC: UBC Press, 1999.
- Gowa, Joanne and Allies. *Adversaries and International Trade*.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Hurrell, Andrew. "Regionalism in Theoretical Perspective." Louise Fawcett, Andrew Hurrell, *et. al.*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Jianping, Zhang.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Seoul: KIEP, 2006.
- Mansfield, Edward and Helen Milner, *et. al.*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Mil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 1943.
- Morse, Edward, L. *Modern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Free Press, 1976.
- Robert,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 Waltz, Kenneth.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Kindleberger, Charles P. *et. al.* (eds.).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70.

2. 논문

- 국정브리핑. 『한·중 ‘FTA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합의』. 2006. 11. 17.
-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2007. 12.

- 김재철. “중국의 경제외교: 경제적 고려를 넘어서.” 『국가전략』. 제13권 4호, 2007.
- 김태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현황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권 1호, 2008. 6.
- 박장재. “광동의 화교경제와 중국-홍콩간 CEPA 체결의 영향.” 『중국학 연구』. 제26집, 2003. 12.
- 서장문. “중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과 향후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서창배. “중국의 FTA 정책에 담긴 정치경제적 함의.” 『한·중사회과학 연구』. 제5권 1호, 2007.
-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 여수옥.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오동윤. “중국·홍콩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협정’ 내용과 시사점.” 『월간 KIEP 세계경제』. 제6권, 8호, 통권 59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8.
- 유현석. “경제적 지역주의의 국제정치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APEC에 의 적용.” 『국제정치논총』. 제42집 3호, 2002.
- 이희옥.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의 함의: 동북4성론 논란을 포함하여.” 『현대중국연구』. 제8집 1호, 2006. 8.
- 전병곤. “중국의 다자주의 지역전략: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10권 1호, 2003. 3.
- _____. “김정일 정권 향방에 따른 중국의 선택.”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08-31. 서울: 통일연구원, 2008. 9. 18.

- 정환우. “과욕과 현실적 제약의 딜레마: 중국의 FTA 경험.” 『현대중국 연구』. 제9집 2호, 2008. 2.
- 최원기. “중국의 한·중 FTA 추진배경과 한·중 FTA 전망.” 『주요국제 문제분석』. 2006. 12.
- 최춘흠. “한·중 서울 정상회담(8.25) 평가.”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08-23. 서울: 통일연구원, 2008. 8. 27.
-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7-47호. 2007. 11. 18~11. 24.
- 홍익표. “한·중 FTA가 북한 및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자료, 2008. 9. 12.
- 姜憲九. “中韓建立FTA의可行性与經濟效應分析.” 『對外貿易』. 第2期, 2008.
- 劉昌黎. “論日本政府回避中日自由貿易區的原因與中國的對策.” 『世界經濟』. 第12期, 2006.
- 龐中英. “中國的亞洲戰略: 靈活的多邊主義.”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1.
- 徐長文. “中國的FTA實施策略与東亞地區經濟整合.” 『中國21(愛知大學現代中國學會)』. Vol. 21, 2005.
- 嚴震生. “中非合作論壇.” 『展望與探索』. 第4卷 第12期, 2006. 12.
- 王磊. “中韓貿易合作的效應, 障礙及政策分析.” 『廣東財經職業學院學報』. 第6卷 第6期, 2007.
- 于瀟. “東亞地區自由貿易發展中的日本与中國的FTA競爭.” 『日本研究』. 第四期, 2006.
- 劉賽力. “合作共贏的中韓經濟關係.”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06.
- 俞新天. “和諧世界與中國的和平發展道路.” 『國際問題研究』. 第1期, 2007.

田香蘭.“日韓FTA動向及對中國經濟的影響。”『東北亞研究』. 第4期, 2005.
曹雲華.“中國加入WTO對中國與東盟關係的影響。”『中國外交』. 第3期, 2002.
秦亞青.“多邊主義研究: 理論與方法。”『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2001.
陳龍山.“朝鮮對中國的經濟依存度分析。”『東北亞論壇』. 第17卷 第3期,
2008. 3.

詹小洪.“韓美FTA談判意在抗衡中國。”『鳳凰週刊』. 2006年 4月 3日.
盧海濤·陳爲國.“構建中韓自由貿易區, 促進東亞經濟一體化。”『經濟研
究導刊』. 第9期, 2007.

張新穎.“振興東北老工業基地三省經濟發展戰略比較及其啓示。”『城市
經濟, 區域經濟』. 2004年 8月.

楊樹明.“中韓自由貿易區構建思路。”『遼寧大學學報』. 第35卷 第4期,
2007. 7.

趙婷.“經濟互補性, 競爭性與中韓建立FTA的可行性。”『環球經濟』.
第11期, 2007.

Kim, Jae Cheol.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XLVI, No. 6, November/
December 2006.

Lee, Hong Sik. *et. al.* (eds.).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5.

Lijun, Sheng. “China-ASEAN Free Trade Area: Origins, Developments
and Strategic Motivations.” *ISEAS Working Paper: International
Politics & Security Issues Series*. No. 1, 2003.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Summer 1999.
Nanto, Dick K. and Emma Chanlett-Avery. “The Rise of China and
Its Effect on Taiwan, Japan, South Korea: U.S. Policy
Choic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April 12,
2005.

3. 기타 자료

『人民日報』.

『中國統計年鑒』.

<<http://www.fmprc.gov.cn>>.

<<http://www.fta.go.kr>>.

<<http://www.gx.xinhuanet.com>>.

<<http://www.kita.net>>.

<<http://www.kotra.or.kr>>.

<<http://www.unikorea.go.kr>>.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외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룡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저	9,000원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	-----------------	-----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의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i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